

# **제3회 소도시연구회 워크숍**

2012. 12. 21

**충남발전연구원 소도시연구회**



## □ 워크숍개요

- 일 시 : 2012. 12. 21(금) 10:00시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 개최목적 : 충청남도 읍·면소재지 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 참 석 자 : 20명 [주제발표 2명, 토론자 3명, 배석자 15명]
  - 연구회 회원
  - 지역활동가
  - 읍·면소재지 담당공무원

## □ 세부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0:00	10:05	5′	• 개 회	이상준(충남발전연구원)
10:05	10:10	5′	• 인사말씀	소도시연구회장
10:10	11:00	50′	• 주제발표 - 1주제 : 2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방향 - 2주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발 표 자
11:00	11:50	50′	• 토 론(지정 및 자유토론)	조 봉 윤 ( 좌 장 )
11:50			• 폐 회	



## - 내 용 구 성 -

- I. 발제 1 : 2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방향  
/ 안 완 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 II. 발제 2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 김 정 연 · 이 상 준 (충남발전연구원)
  
- III. 부록 1 :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메뉴얼
  
- IV. 부록 2 : 2014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추진계획
  
- V. 부록 3 : 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I . 발 제 1 : 2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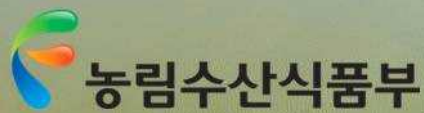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방향

/ 안 환 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 농산어촌 지역개발 정책추진 방향

2012. 12. 21.



지역개발과 안원기

농림수산식품부

## 차 례

I . 추진 현황

II . 추진성과 및 문제점

III . 제도개선

IV . 20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I. 추진현황

### 1. 추진 경과

- **지역발전 선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태동**
  - '03년 5월 농정기획단이 구성, '04.02.23일 발표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 **'10년 광역화 특성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규특법 개정 '09.04.22시행)**
  - 포괄보조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등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
- **주민 참여형 상향식 “ 권역단위 종합개발 ” 사업으로 추진**
  - 종합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1개 법정리 이상의 여러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종합개발 추진
    -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70%, 지방비30%)
  - '07년 FTA, 식품정책 등 여건 변화로 2013년까지 1,000개 권역 개발 목표에서 2017년까지 목표 연장

## I. 추진현황

### 2. 추진 개요

-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각 한도액을 배분**
  - 계속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재부가 배분
  - 신규사업은 농식품부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
    - \* 예산('13, 지역계정) : (계속) 8,185억원, 89.1%, (신규) 997억원, 10.9%, (합계) 9,182억원
- **신규사업성 검토**
  - 신규 사업유형 : 읍(동)면, 마을권역단위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아이디어사업, 역량강화 사업
    - \* 기초생활인프라사업(계속사업),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및 창조·녹색성장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 **진행중인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및 컨설팅팀 구성·운영 등 포괄보조사업의 지원제도 보완

## I. 추진현황

### 3. 연도별 개발사업 변동현황

중 전('09년까지)	연 행('10~'12년도)	'13년도
1. 소도읍 육해영안구 2.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농식품부) 3. 농촌마을 종합개발(농식품부) 4. 어촌 종합개발(농식품부) 5. 산촌생태마을(산림청) 6. 전원마을 조성(농식품부) 7. 주거환경개선(국토부)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 권역단위 종합정비 3. 신규마을 조성 및 개선 4. 기초생활 인프라장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지표수 보강개발 - 소규모 용수개발 - 농어촌체험마을 지원(11) 5. 기타 자율사업 - 창조지역사업(지역위) - 녹색성장사업(지역위) - 연계협력사업(지역위)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 권역단위 종합정비 3. 신규마을 조성 및 개선 4. 기초생활 인프라장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지표수 보강개발 - 소규모 용수개발 - 농어촌체험마을 지원 - 공동문화조성사업 - 공동소득사업 5. 기타 자율사업 - 창조지역사업 - 녹색성장사업
8. 농촌생활환경정비(농식품부) 9.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농식품부) 1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농식품부) 11. 지표수보강개발(농식품부) 12. 소규모 용수개발(농식품부) 13. 개발촉진지구(국토부) 14. 살기좋은도시만들기(국토부)		
15. 산업력지역 지원(영안구)	- 복합산업과 지원으로 이관	6. 지체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

## I. 추진현황

### 4. 그 동안 추진실적

유형별	사업내역	포괄보조사업 이전						포괄보조사업 이후					합계
		'05	'06	'07	'08	'09	계	'10	'11	'12	'13	계	
합 계(개소 수)		133	45	53	87	64	382	158	236	167	181	742	1,124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계	37	21	6	22	9	95	8	56	72	80	216	311
	읍면소재지종합정비	-	-	-	-	-	-	-	39	72	80	191	191
	소도읍육성	37	21	6	18	5	87	8	1	-	-	9	96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	-	-	4	4	8	-	16	-	-	16	24
권역단위 종합정비	계	35	20	44	36	42	177	133	161	86	85	465	642
	권역단위종합정비	-	-	-	-	-	-	-	91	86	85	262	262
	농촌마을종합개발	35	20	41	36	35	167	52	58	-	-	110	277
	어촌종합개발	-	-	3	0	7	10	3	3	-	-	6	16
	산촌생태마을조성	-	-	-	-	-	-	78	9	-	-	87	87
신규마을조성 및개발	계	61	4	3	29	13	110	17	19	9	16	61	171
	신규마을조성및개발	-	-	-	-	-	-	-	19	9	16	44	44
	전원마을조성	-	4	3	29	13	49	17	-	-	-	17	66
	주거환경개선	61	-	-	-	-	61	-	-	-	-	-	61



## II. 추진성과 및 문제점

### 1. 추진성과

#### ● 2012년까지 읍면소재지의 84.4%, 면소재지는 15.9%, 마을은 11.2% 개발

● 일반농산어촌지역의 행정구역/전체 : (읍) 167개소/216, (면) 1,070개소/1,188 (리) 32,883개소/36/590

#### ●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농어촌의 여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 읍면단위 :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하여 거점 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향상

● 소생활권 :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5~6개 마을)하여 소득기반, 생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정비

● 마을단위 : 발전모델로 활용할 특색있는 마을 조성, 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 균등으로 마을정비 추진

#### ● 농어촌 기초인프라 개선으로 생활환경 개선,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

● 농어촌 종합정비로 농업인 복지향상 도모, 마을개발사업의 리더·조력자 등 핵심적 역할(1,064개소중 494지구)

\* 생활환경정비 : ('11) 133개소/1,988억원 → ('12) 114/1,833 → ('13. p) 98/1,269

## II. 추진성과 및 문제점

### 2. 문제점

#### ● 포괄보조제도 도입취지인 창의적이고, 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해 특성화된 개발 미흡 및 기존 사업을 모방·답습,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에 따른 행정 비효율

● 사업유형이 정해져 있어 이 이외의 농어촌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

● 마을개발사업을 건설, 농정, 도시·건축·주택 등 부서에서 분산 추진(과 편제가 불목별로 구성, 공간으로 변경 필요)

#### ● 사전 계획성 미흡, 사업성이 결여되어 주민갈등 및 빈번한 사업변경 사례,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시설물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 우려

●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급조,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미반영되어 갈등 유발

● 완료된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계획,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방치하는 사례

#### ●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환경 파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설치, 자연과의 부조화로 농어촌 미관 훼손

● 농어촌 경관계획이 관련법상(경관법, 농어촌정비법, 숲의질법 등) 권장사항으로써 경관관리 의무가 강제되지 않음

● 마을개발사업의 건축물 경관심의를 있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심의대상 : 높이 21m 이상 건축물, 교량(50m), 도로개설(5km)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

## II. 추진성과 및 문제점

### 2. 문제점

- 각 시·군의 신규 사업량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 예산의 과다 집중 우려
  - 신규사업 실행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일부 시·군에 사업예산 편중 될 우려
-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효율적 시스템 부재
  - 2000년 이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포괄보조)은 54개 사업, 23천개 사업지구이며, 역설 증으로 관리
  - 사업점검 및 투자 효과성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업별 이력관리가 없어 성과 측정에 애로
- 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방치 우려
  - 읍면소재지,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의 추진기간은 3~5년간으로 사업종료 이후는 별도 지원사업 없음
-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잦은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에 대한 시·군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불평, 불만을 토로
  - 사업성 검토, 추진실적 평가,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 등으로 지자체 업무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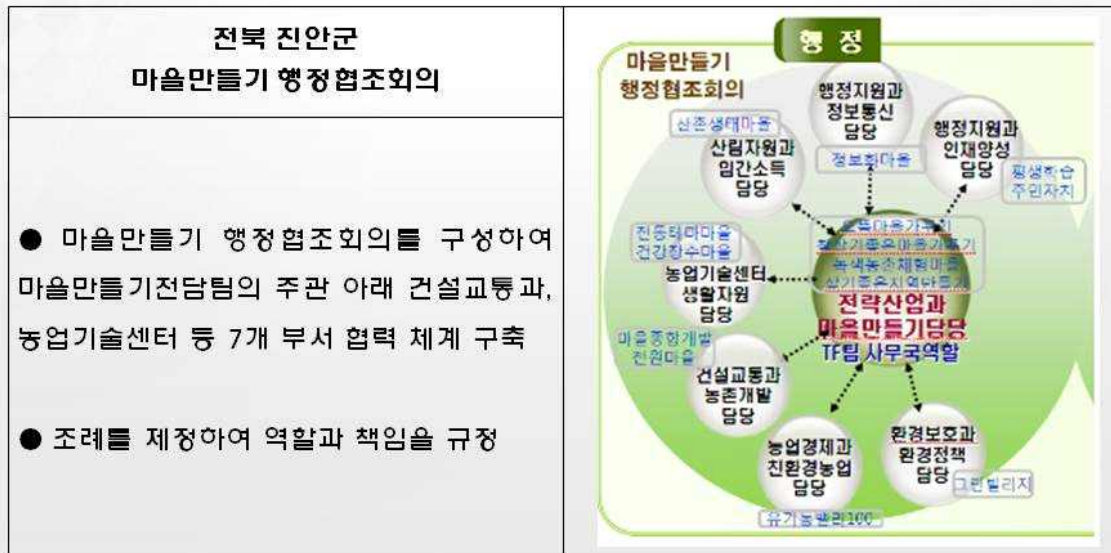
## III. 제도개선

### 1.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강화

- 사전 계획성 미흡, 사업성이 결여된 곳이 대상지로 선정될시 빈번한 사업 계획변경,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예산낭비가 우려
- (개선) 경쟁력 있는 마을, 역량이 강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전담부서 설치
  - 농어촌 현장포럼 개최, 현장활동가 및 활성화센터를 활용하여 사전 지역의 역량강화를 추진
    - \* 현장포럼 : ('12) 44개 마을 → ('13) 237개 마을(117개 마을 × 2개 마을)
    - \* 현장활동가 : ('12) 690명 → ('13) 500여명 확충(지자체 마을개발 담당 및 시군기술센터 소속 지도직공무원)
  - 2014년도부터 시장군수가 운용 가능한 역량강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전 역량강화 추진 도모
    -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시군별 5천만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1년간
    - \*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관계자 교육,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농어촌 공간개발사업의 담당부서 통합 유도
    - \*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최대한 업무를 통합하고, 통합제외 업무는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 ● 전담부서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사례)



- 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전담팀의 주관 아래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 협력 체계 구축
- 조례를 제정하여 역할과 책임을 규정

## Ⅲ. 제도개선

### 2. 시·군의 자율성 제고, 사업유형의 다양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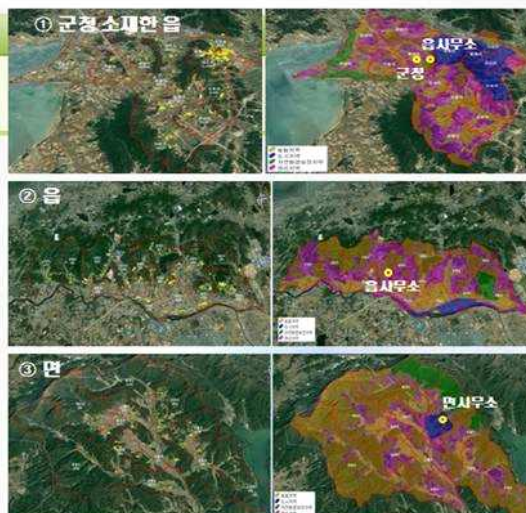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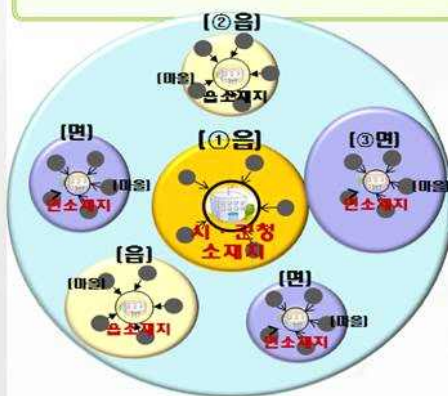
- 시·군의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특성화된 개발이 미흡하고, 기존 사업의 답습·모방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획일화 우려
- (개선) 마을개발 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중” 지역도 포함하여 도농복합시의 농산어촌지역의 중심지 재생 개발을 추진
    - \* 읍면(등)소재지 정비사업 대상지의 인구 증가, 과거 지원사례 등을 종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기 지원한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고, 농어촌 정주체계별(읍-등-면-마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화(경관, 공동소득, 문화, 운종 등)하고, 무분별한 체험마을 조성을 지양
    - \* 소공원, 마을 및 도로인접 경관 개선, 마을공동 소득·문화 등 다양한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 발굴 지원
  - 신규마을 조성 입주규모 축소를 통해 귀농·귀촌 적극 유도
    - \* (현행) 20세대 이상 12~36억원 → (시범 추가) 10~19세대 5.7억원

## Ⅲ. 제도개선

- 농산어촌 삶의 질의 균등한 서비스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주체계를 고려한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개선

● 사업을 위한 공간 위계: 3계층

읍 > 면 > 마을



## Ⅲ. 제도개선

### 3.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마을개발 사업 추진

- 통합성·일관성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 부재로 환경파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설치로 농어촌 경관 훼손
- (개선) 총괄계획가제도 시범사업 확대 및 마을 경관형성계획 수립 의무화
  - 총괄계획가 제도(MP)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과 지역주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경관·디자인 검토 지원
    - ★ 2012년 총괄계획가 시범실시 : 7개소(원주, 괴산, 예산, 임실, 진도, 의성, 하동)
  -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농어촌 마을 경관형성 계획수립 의무화 추진
    - ★ 부적합 시설물, 주의가 필요한 시설물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사전 사업성 검토를 강화
    - ★ 경관계획 수립방향,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우수환경 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지자체 홍보
    - ★ 읍면소재지, 마을권역중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등 다양한 마을개발사업이 우선 경관형성계획 수립 의무 부과
  - 농어촌 경관 관련 연구를 통해 "경관 가이드 라인" 등 개발 보금
    - ★ 농업·농촌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 체계 개발, 농촌경관 디자인 추진전략 등



### Ⅲ. 제도개선

#### 4. 농어촌의 균형발전 도모

- 각 시·군별 신규 사업량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 예산이 과다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관심 및 역량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낙후도 지속
- (개선) 농산어촌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별 신청 수량을 제한하고, 농어촌 개발에 대한 시·군의 관심유도, 산촌·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개발 추진
  - 사업유형(읍면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아이디어사업 등)에 따라 시군별 각 1건씩 신청토록 하고, 관심 및 역량이 부족한 시·군에 대하여는 역량강화 추진
    - \* 도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 이내의 추가물량을 도에서 특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
  - 농산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마을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신규사업 선정시 고려
    - \* 산림기본계획(5차) : (전반기) '08~'12년 30개소/매년, (후반기) '13~'17년 60개소/매년
    - \* 어촌종합개발사업(2단계) : '07~'13년, 22개소(시도별 1~9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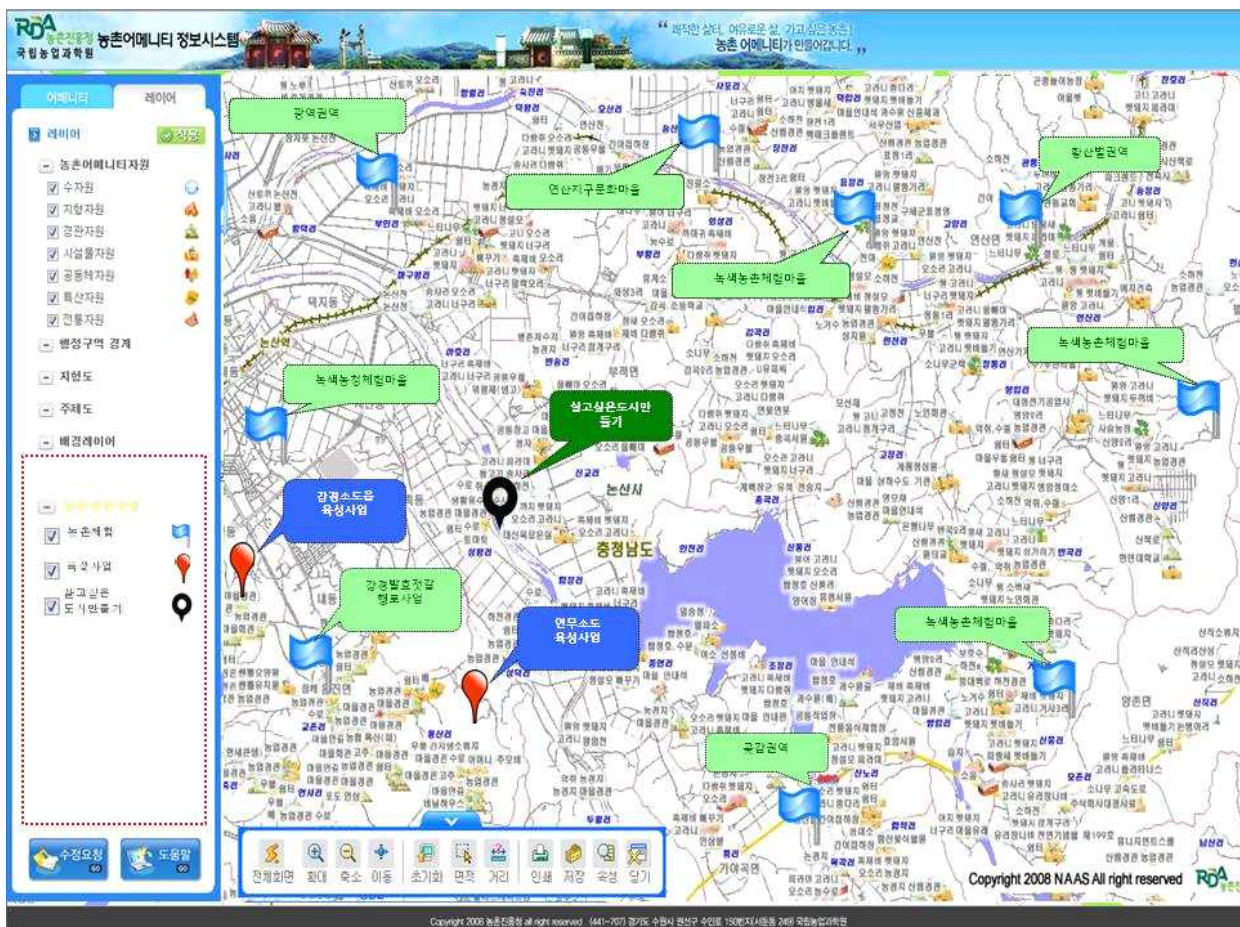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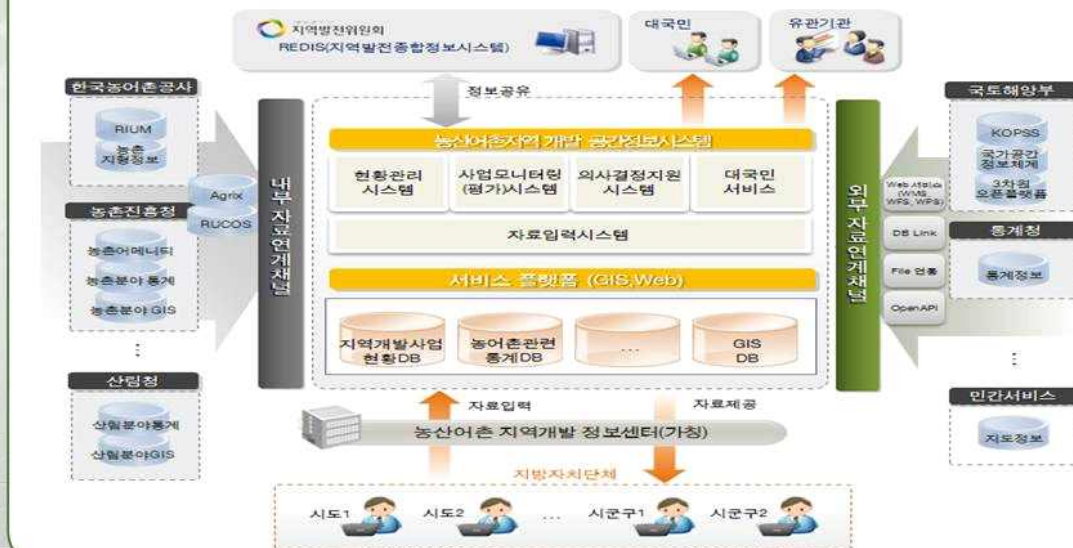
### Ⅲ. 제도개선

#### 5. 지역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효율적 시스템 부재
- (개선) 지역개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RAISE) 추진
  - GIS를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사업 접수·평가를 추진하고, 과거 지역개발사업 (54개 사업, 23천개 사업장)을 D/B를 구축, 분석기법 활용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농어촌 개발사업 지원
    - \* 2011.12월 BPR/ISP 연구용역 추진, 2012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D/B(325개소) 시범구축 추진
  - 농진청 어머니 자원도, 지역발전위원회 REDIS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향후 국토 공간정책 분석시스템을 확대
    - \* 농진청에서는 '05~'12년까지 1,185읍면, 30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촌의 어머니 자원(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 등)을 조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

## 지역개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 2000년 이후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약 23천 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실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문에만 매년 1,000여 개소 이상의 사업이 진행(약 1조원 투입)
- 효율적 사업관리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자료의 전산화 및 GIS 시스템 구축 필요





## 6.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대책

- 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지원사업장의 방치 우려
- (개선) 완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성학교, 로컬푸드 및 공동체회사 지원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숙박, 식당, 체험장 등의 시설이 구축된 곳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장으로 지정 활용할 (11.13, 교육부와 MOU 체결)
    - \* 농식품부는 농어촌 현장체험시설과 지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과부는 학생들이 농어촌 체험학습 시설을 활용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인성학교에 교육과정 개설과 학습시간을 인정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향토음식으로 제공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
    - \* 일본 효고현은 지산지소 조례제정(2008), 농진청 농가 맛집(2007부터 45개소)
  - 마을권역 협회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농산어촌 마을 홍보, 교육 및 정보교류를 통해 활성화 유도
  - 부족한 마을권역의 행정력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 및 운영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 농어촌마을권역 인성학교 지정 운영(MOU체결)

- ▶ 일 시 : 2012. 11. 13(화) 15:40 ~ 16:40
- ▶ 장 소 : 내현마을권역  
(충청남도 홍성군)



### ▶ 주요내용

- (농식품부) 농어촌마을 현장학교 운영  
시설물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교과부) 학교 학생 인성교육과정 개설  
학습인정 제도화 정착 지원 등

### Ⅲ. 제도개선

## 7. 행정 간소화를 통한 시·군의 업무부담 해소

-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잦은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에 대한 시·군 담당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불평, 불만을 토로
- (개선) 의무적인 모니터링, 컨설팅은 지양하고,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하되, 원하는 시·군에 대하여 지원토록 개선, 평가업무 등 절차 및 방법 간소화 추진
  - 농어촌개발사업 지원방안(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획기적으로 개선(→ 헬프데스크 구축)
    - \*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문의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사업기획, 계획수립, 착공, 공사, 사후 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현장의 필요사항을 맞춤지원 및 사업진행과정 관리 추진하는 헬프데스크 구축운영
    - \* 추진현황 : ('10) 자체 모니터링 → ('11) 9개도 11개팀(33인)의 전문가 그룹 → ('12) 지원단 운영(38개 시군)
  -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역위 제군
    - \* 2012년 실적분 평가부터 사업결과 순위 없이 검토 의견만 제출토록 변경
  - 매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1단계(2010~2014년), 2단계(2015~2019년)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변경

### Ⅲ. 제도개선

## 8.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도모

- 지역개발 업무의 기본설계,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업체 중 일부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
- (개선)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 마을권역 사무장 제도 개선 및 컨설팅 업체 법인 설립 지원
  - 농어촌 지역개발 업무의 내용이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의 검증이 필요
    - \* 농어촌 지역 개발에 대한 국내 표준 제시로 농어촌 지역개발 부문의 전문화 유도, 체계적 인력양성방안을 마련
    - \* 농어촌 주민에 대한 양질의 지역개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
  - 컨설팅 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우수 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업체의 교육, 역량강화 추진 등을 위해 법인 설립지원
    - \* 2012년말 사업지구는 557개 사업장(2012년 말 136개 완공 예정)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00여 개 내외
    - \* 완료권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S/W 업체 발굴하여 등록 관리
  - 마을권역 사무장 제도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역량강화를 통해 원활한 마을개발사업 지원
    - \* 경력관리, 체계적 교육, 포상·해외연수, 선발절차·보수지급 체계 개선, 인센티브 지원·기간연장 등



## IV. 20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명	사업내용
1. 읍면(등)소재지 종합정비	○ 사업비: 읍(등)(100억원), 면(70억원 이내), 사업기간: 4년간, 농산어촌 거점 읍면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소재지 종합정비,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등 * 기초생활 50% 이내(도로 개설 등)
2.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 사업비: 권역당 50억원 이내, 사업기간: 3~5년간, 권역당 2개 이상 마을 등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행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공동소유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3. 신규마을조성	○ 사업규모: 소규모 10~19가구(3~5.7억원 이내), 20~29가구(12억원이내)~100가구이상(36억원이내) ○ 사업기간: 1~3년간(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 분산된 마을정비사업)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전원마을조성 등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및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개발, 분산된 마을의 정비
4. 지역창의 아이디어	○ 사업비: 2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1~3년간, 시군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경관개선사업: 소공원(저수지, 애안가, 산, 들녘 등), 마을경관, 가로경관,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소득, 공동문화 등, 기타 아이디어사업(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귀농·귀촌 특화사업 등)
5. 시군 역량강화사업	○ 사업비: 시군별 5천만원 이하, 사업기간: 1년간, 시군 사업추진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내발적 지역개발 능력 확보,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관계자교육, 박람회참가 등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지자체 연계협사업, 창조·녹색성장 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 2011년 영국 코츠월드 경관연수

농림수산식품부



영국 코츠월드(쿨른강)



(송어농장 풍경)



(바이버리마을 거리)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

농림수산식품부



남해 (앵강다숲 권역)



예천 (회룡포 권역)

온 국민에게 사랑 받는 농어촌 공간 실현

감사합니다.



## Ⅱ. 발제 2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 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 김 정 연 · 이 상 준 (충남발전연구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일반농산어촌지역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김정연·이상준

차례	
1. 서론	4. 일반농산어촌지역 중심지 계획방식의 개선방안
2. 관련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5. 결론
3. 일반농산어촌지역 중심지 계획방식의 평가	

## 1. 서론

농촌중심지는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 있어서 시청소재지(洞部), 읍소재지, 면소재지 중에서 배후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을 연결하는 교통 결절이자 개발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농촌중심지에 대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2003년부터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사업(지방소득세특별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면소재지 대상의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농촌중심지 정비사업이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가,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농촌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김정연·박종철, 2009; 김정연 등, 2010).

이 논문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는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120개 일반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 자율 포괄보조사업의 하나로서 모든 읍소재지와 면소재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로서 읍·면소재지의 기능을 중시하여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1).

포괄보조금제도 하의 농촌중심지 정비정책은 2011년부터 비로소 추진되기 시작한 탓에 대부분의 지역이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기본계획 또는 실시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편이나,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계획수립·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매년 수정되고 있을 정도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계획방식 특히, 계획수립 대상지역, 계획대상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에는 농촌중심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각 시·군에서 작성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제안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 인터뷰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농어촌공사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관련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 2.1. 관련 정책 동향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sup>1)</sup>의 도입에 따라 농촌중심지 정비사업은 7개 정책분야<sup>2)</sup> 24개 포괄보조사업군<sup>3)</sup> 중에서 기초생활기반확충 부문에 속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의 위치에 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특수

2 기존 각 부처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포괄하고, 관련 사업간 통합을 통해 관리부처를 단일화 하였으며,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예산편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3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기반 확충

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자원 개발, 체육진흥시설지원, 지역문화사업 육성지원(이상 문화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문화재청),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이상 농식품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농진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이상 산림청), 지역특성화산업육성(지경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중기청), 청소년시설 확충(복지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이상 환경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대중교통 지원,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지역거점 조성 지원(이상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국토부), 특수상황지역 개발(행안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국토부), 일반농산어촌 개발(농식품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환경부)

상황지역개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과 성장촉진지역개발 등 4개의 사업군으로 구분된다.

각 부처는 관할하는 기초생활권 지역유형을 대상으로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처마다 농촌중심지에 대한 인식, 적용대상 사업의 유형, 접근방식 등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권지역 유형별로 농촌중심지 개발전략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하나로 「읍·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업으로서 생활편익·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 읍·면소재지의 환경보전 및 중심가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 등,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시설, 주민교육, 국내의 선진지 견학, 지역컨설팅,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마을 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p.20).

행정안전부는 「'11년 특수상황지역 예산편성 가이드라인(2010. 5)」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도 특수상황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도읍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지침(2010. 3)」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주요 사업 형태를 ‘주거지 재생사업’<sup>4)</sup>, ‘중심시가지재생사업’<sup>5)</sup>,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sup>6)</sup>, ‘지역역량 강화’<sup>7)</sup>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속한 읍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권 중심지 관련 사업 중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

4) 기존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된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및 복지회관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예시하고 있다.

5) 기존사업으로서 중심시가지 간판정비사업, 보행자 우선(전용)구역 조성사업,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다목적회관, 야외 소공연장, 시골장터 정비, 평생교육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응급서비스, 교통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 문화시설 건립,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등을 예시하고 있다.

6) 기존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마을 수변공간 정비, 생태공원 조성, 녹색도시 인프라 조성, 문화·환경 등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연결도로·마을안길·버스승강장·주차장·교량, 암반관정·농업기반시설·농산물 가공공장·건조시설·공동집하장·공동창고·선별시설·공동판매장·공동육묘장·저장고, 야영장·농촌체험시설·생태학습장·폐교임대활용·산책로, 농업기반시설(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폐교임대활용, 산책로 등)을 예시하고 있다.

7) 기존사업으로서 도시대학 운영, 도시(마을)닥터 운영사업, 도시재생프로그램 개발 운영,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주민역량 교육 및 마을해설사 양성, 지역문화교실, 마을홈페이지 구축 등을 예시하고 있다.

사업과 함께 특수상황지역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농촌중심지 정비(활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시활력증진지역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대도시의 중심시가지·주거지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중에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사업목적, 법적근거, 접근방법, 사업내용, 지원조건이 모두 상이하여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론은 피하고자 한다.

표 1. 기초생활권 유형별 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 비교

구 분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li> <li>· 기초서비스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농어촌 중심거점 육성</li> <li>· 지역소득증대·생활복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준 보장</li> <li>· 특색 있는 지역발전 도모</li> </ul>
법적근거	· 삶의질 향상법 39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접근방법 (사업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테마 발굴, 부존자원 활용한 명소화</li> <li>· 선택과 집중에 의한 체계적 지원</li> <li>· 지자체의 능동적인 조정으로 관련 사업의 연계추진</li> <li>· 다양한 관계자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과 집중, 효율성 제고 및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li> <li>· 지역특성 살린 창의적 사업 우선 선정</li> <li>·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큰 사업 우선 선정</li> <li>· 지역공동체 주도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사업계획 통한 지역발전사업 체계적 추진</li> <li>·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 구성</li> <li>·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전략</li> <li>· 도화사업 극대화방안 마련</li> </ul>
기초생활권 유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 특수상황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 100억원 이내 국고보조</li> <li>· 면: 70억원 이내 국고보조</li> </ul>	· 50억원 국고보조	· 사업비 총액의 50% 국고보조

## 2.2. 선행연구 검토

농촌중심지에 관한 연구는 최양부·정철모(1984)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농촌정주체계의 설정, 중심지 계층별 중심기능의 확인 및 대안 제시, 농촌중심지의 개발방향과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양부·정철모(1984)는 농촌중심지체계 대안을 「농촌중심도시-소도읍(Ⅰ, Ⅱ)-마을」의 3단계로 구상하였다. 여기서 농촌중심도시는 인구 20,000~100,000명으로서 농촌

정주생활권의 중심이 되고, 인구 3,000~10,000명인 소도읍 I (읍·면소재지)은 농촌중심도시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들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낮은 특수지역에 있어서는 인구 1,000~3,000명인 면소재지나 그 이하의 중심지를 소도읍Ⅱ 즉, 농촌지역의 최하위 서비스 중심지로 상정하였다. 또한, 인구 1,000명 이하의 면소재지나 마을은 농촌중심지로서 기능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촌중심지 개발이라는 차원보다는 주거환경개선과 경지기반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마을종합개발 차원에서 개발토록 제안하였다.

소도읍육성정책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김정연·권오혁(2002)은 소도읍과 배후농촌 주민의 Civil Minimum 유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되, 단순한 시설 설치나 정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주민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소도읍의 활성화를 촉발·지속케 하기 위한 선도·전략사업을 발굴하여 특성화하되, 소도읍 재생(Small Town Regeneration)을 위한 전략적 요소를 선택하며,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림부·농업기반공사(2005)는 '면단위 정주권개발사업'에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되, 인구 10,000명 이상인 거대면은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대상으로 하거나 제외하고, 인구 5,000~10,000명인 면은 면소재지 활성화사업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하며, 인구 5,000명 이하인 면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생활환경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송미령 등(2008)은 농어촌 중심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활성화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시·군청 소재지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신개발보다는 재개발을 지향하며, 기존 시설의 외곽 이전 또는 신규 시설의 기성 시가지 외곽 입지를 되도록 피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사업인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등을 활용하되,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한 거점면이 소생활권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면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송미령 등, 2008, 90-91).

성주인 등(2008)은 중앙정부가 농촌 중심지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되, 지자체 차원의 중심지 관련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역 차원의 시책에 대한 지원 제공 방향 및 농어촌 서비스의 기준과 그에 따른 개선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을 포함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 육성 사업의 연계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추

진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및 농촌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도입,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재지 거점시설 운영 등을 시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 단위의 대안적 교통수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시하였다.

김정연·박종철(2009)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첫째,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과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 하나의 농촌중심지 개발정책의 틀 속에 포함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정주체계의 설정, 농촌중심지간 기능 분담, 농촌중심지별 전문화와 특성화, 관련사업의 통합·연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시·군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점면소재지가 가지고 있는 배후농촌의 중심지이자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특징을 살려서 시·군발전계획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거점면소재지 또는 주변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업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 연계 하에 수립되어야 하며, 셋째, 거점면소재지에 적합한 계획서의 구성과 사업내용의 유연화를 도모하며, 넷째, 파트너십에 의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재준 등(2010)은 기초생활권 중심지 계층별 적정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역의 중심지 계층과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고, 고차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물리적 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취약계층 읍·면을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련서비스 시설의 복합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서비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적 대중교통수단 운영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김정연 등(2010)은 포괄보조금제도 하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으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종합계획의 위상 정립과 추진체계의 개선, 농촌정주체계의 특성과 농촌중심지 위계에 따른 기초생활서비스의 적정 배치, 농촌중심지의 컴팩트화와 복합·연계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농촌중심지의 전원도시 기능 강화, 광역적 생활서비스 기능의 공동이용방식 도입·확대, 농촌교통서비스의 유연화를 통한 농촌중심지와 배후 농촌지역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촌중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어떤 중심지를 개발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개발전략과 계획수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농촌중심지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기초생활권 유형별 중심지 정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 3. 일반농산어촌지역 중심지(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의 평가

#### 3.1.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읍면소재지의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농어촌지역의 개발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1).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를 발굴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명소화의 추진, 읍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의 수립, 선택과 집중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 지자체의 능동적인 조정에 의한 분산 추진되는 각 사업들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지자체가 지역주민·지역리더·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농촌활성화 거점, 도농 연계의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3.2.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9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의 읍·면지역 중 읍면소재지의 중심지역으로 하되, 현재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거점공간으로서 서비스기능 향상이 가능한 읍면소재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1).

이 경우 모든 읍·면소재지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500명 이하의 영세한 면소재지로서 중심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도 정비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한다.<sup>8)</sup> 그 결과 농촌중심

지로서 기능하는 읍면소재지와 그렇지 못한 읍면소재지가 동시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하나의 시·군지역에서 3~4개의 중심지 계층이 발견되고, 이 중에서 1~3개의 읍면소재지 정도가 제1, 2계층을 형성하면서 농촌중심지로서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3계층 이하의 면소재지들은 중심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정연, 1999; 송미령, 2008; 성주인, 2008; 김정연, 2010). 이와 같이 중심지 기능이 약하거나 상실한 읍면소재지를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잉계획(Over Pla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도시규모 또는 중심기능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의 정비를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과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영국의 마켓타운 이니셔티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중심지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농복합시의 시청소재지(洞部)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농복합시의 시청소재지(洞部)가 군청소재지읍과 동일하게 수위 농촌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농촌중심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농촌정주체계의 안정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상과 같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 일정 기능 이상의 중심지로 대상지역을 조정하거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심지의 기능(계층)에 적합한 정비방식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8) 2012과 2013년 신규사업 검토를 위해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읍면소재지의 인구규모는 다음과 같다. 금산군 남이면소재지 439명(농가 190호, 비농가 7호), 예산군 신양면소재지 489명(농가 199호, 비농가 21호), 공주시 이인면소재지 702명(농가 116호, 비농가 162호), 예산군 광시면소재지 865명(농가 161호, 비농가 205호), 서산시 지곡면소재지 881명(농가 153호, 비농가 233호), 논산시 은진면소재지 1,206명(농가 259호, 상가 106호, 기타 63호), 아산시 영인면소재지 1,346명(농가 122호, 상가 63호, 기타 59호), 서산시 대산읍소재지 2,061명(농가 250호, 비농가 748호), 아산시 선장면소재지 4,344명(농가 951호, 비농가 1,781호), 예산군 삼교읍소재지 4,752명(농가 889호, 비농가 1,003호), 당진시 함덕읍소재지 10,919명(농가 1,855호, 비농가 2,898호), 부여군 부여읍소재지 17,070명(농가 1,391호, 비농가 5,005호)

표 2. 사업유형별 대상지역 비교

구분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마켓타운 이니셔티브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3천~1만명 수준의 면으로서 면 소재지를 중심의 1개 법정리 이상의 중심마을</li> <li>· 인근 도시지역에서 기초서비스 충족하는 면 1만명 이상 면과 인구과소지역(3천명 미만)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소재지의 중심지역</li> <li>· 지역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거점공간으로 서비스기능 향상이 가능한 읍면소재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읍소재지</li> <li>· 면 지역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2천명~2만명의 마켓타운 (유럽연합은 인구 2.5천명~3만명의 소도읍을 정책대상으로 하되, 과소지역이나 연담도시지역 등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li> </ul>

### 3.3.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대상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의 기능별 사업인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시설 등과 같은 시설 위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복지·문화 등의 시설의 설치와 중심시가지 경관정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서 교육·훈련, 마을 홍보 등과 같은 세부사업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지역의 사회·복지·문화·체육 등의 운영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은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재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시장정비 등과 같은 시설정비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9). 따라서 시설계획과 연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의 소프트사업을 포함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제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복지·문화·체육 부문의 다양한 시설사업들이 기초생활기반 확충부문의 세부사업으로 묶여있는 반면에, 지역경관사업은 하나의 부문으로서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등의 비물리적인 사업과 최근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민 주도형의 마을만들기나 근린형 도시 재생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표 3.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지역경관개선	소득기반	채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시장정비 등
	도시경관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S/W)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지역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 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 운영관리 P/G 지원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22.

표 4. 농촌중심지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사업 비교

구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도시활력 증진지역사업	마켓타운 이니셔티브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기반</li> <li>· 지역경관개선</li> <li>· 지역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반시설 확충</li> <li>· 지역산업진흥</li> <li>· 생활환경개선·복지 증진</li> <li>·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재생</li> <li>· 중심시가지재생</li> <li>· 기초생활기반 확충</li> <li>· 지역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li> <li>· 지역경제·중심시가지</li> <li>· 사회·커뮤니티</li> <li>· 교통·접근성</li> </ul>

### 3.4.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수립 및 추진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 및 정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011년부터 실제 추진과정을 보면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에 각각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계획수립에만 3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계획내용과 사업비의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예산군 광시면소재지에서와 같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여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계획서의 내용에 있어서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의 경우는 사업대상지 개요(공간적 범위, 지역현황),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계획 등), 읍·면소재지 발전방향(기본방향, 공간별 발전방향,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구성되며, 30~50쪽 범위 내에서 작성하도록 예시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52-66). ‘기본계획’의 경우는 개발여건(계획수립 개요, 지역현황,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목표 및 과제, 개발체계 및 공간구상,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개발지표 선정), 개발계획(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 투자계획(투자계획, 집행계획,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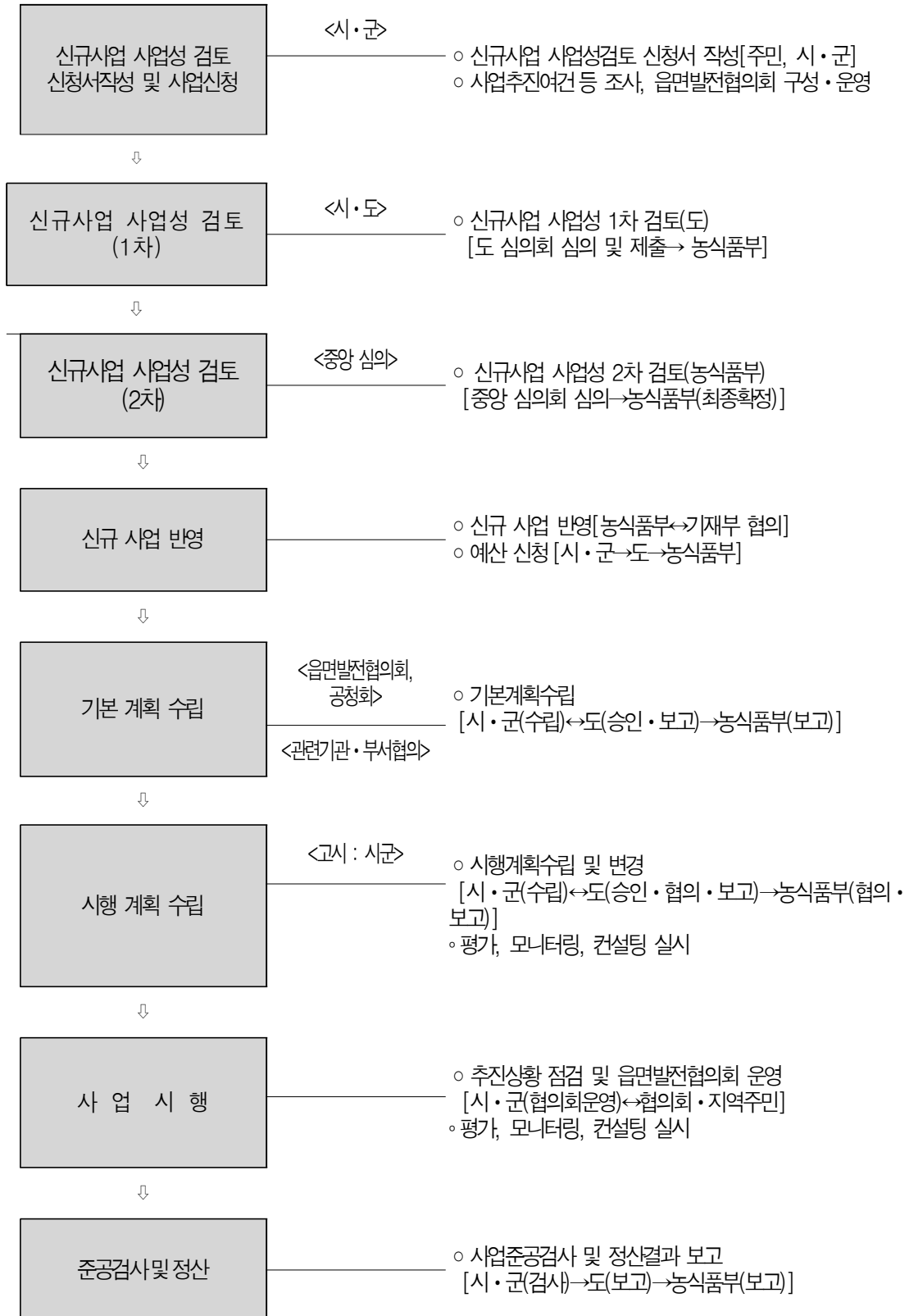
여기서 계획작성 방법상 몇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1-66). 첫째,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있어서 생활편의시설 현황(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금융 및 사업시설)은 개개 시설의 명칭, 면적, 건축연도, 이용대상, 운영형태 등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지역산업 현황(상가촌 현황, 제조업 현황, 유통 및 가공시설)은 사업체명, 판매(생산)품목, 건축연도 및 층수, 면적 및 위치, 종사원수, 이용대상, 운영형태 등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읍면소재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시설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그에 따른 시가지 차원의 과밀·혼잡, 쇠퇴·낙후 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신규사업 신청서에서는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의 기능유형별로 세부사업을 나열하여 제시하는데 그치고, 사업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각각의 사업계획에

위치,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기능별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을 둘러싼 여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조성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12, 29)’의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구체적인 타당성의 파악과 계획내용의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문별 사업계획을 주로 시설계획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고, 그것의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9). 넷째, 사업계획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의 기능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시·지역재생에서 강조되고 있는 일정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Area-based Integrated Approach) 즉, 일정 범위의 지구 또는 시가지에서 관련 사업의 연계·복합의 문제를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비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소재지발전협의회 이외에 해당지역에 필요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다섯째,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교육훈련(지역주민, 지역리더, 선진지 견학), 마을홍보(축제 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운영 P/G), 부대비용(기본계획, 세부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적합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30).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추진체계는 시장·군수, 광역시·도,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등으로 이루어지며(농림수산식품부, 2012, 23-26), 특히 그간의 농촌개발 경험을 살려 지자체의 자율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도와 중앙부처의 지침과 유권해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포괄보조사업의 특성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민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읍면발전협의회는 대체로 1년에 1~2회 정도 개최되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sup>9)</sup> 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획수립자(대부분 용역사)와 개별화된 지역주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9)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수립 매뉴얼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림 1.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24.

## 4. 일반농산어촌지역 중심지 계획방식의 개선방안

### 4.1. 계획 목적과 위상의 재정립

현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목적은 배후 농촌주민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심시설의 확충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읍면소재지는 중심기능 외에도 농촌지역의 개발거점기능, 전원도시적 정주기능, 산업입지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중심시가지·전통시장·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의 기존 자산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Regeneration)을 도모할 수 있으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6차 산업화의 가공·유통의 거점, 지역식품체계(Local Food system)의 거점, 도농교류의 거점, 귀농·귀촌인의 전원도시적 정주거점 등의 기능이 새롭게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중심지 정비의 목적에 서비스 중심로서의 기능 강화 외에, 중심지와 배후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발거점으로서 경제적 활력의 회복, 사회·문화적으로 일체화된 생활권의 형성과 유지,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결절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포괄보조사업비를 사용하여 주어진 4년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실행계획(Strategic Action Plan)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계획서의 작성에 있어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슬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계획에 대해서 지침 역할을 해줄 상위계획 즉,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중심지계획으로 위치지우거나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의 농촌중심지 정비계획으로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농촌중심지 계층과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박양호 등, 2003; 김정연 등, 2010).

### 4.2. 계획 대상지역의 확대 및 중심지 계층별·지역별 차별적 접근

도농복합시의 수위 중심지인 시청소재지도 군청소재지와 마찬가지로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농촌 중심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성주인 등,

2008, 102).<sup>10)</sup> 그렇게 되면 도농복합시 정주체계의 합리적 재편과 개별 중심지의 기능분담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시·군청소재지는 시·군 전체 인구의 40~60%에 달할 만큼 인구비중이 높은 만큼 사업추진의 대상이 소재지 자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서 읍면소재지 간 중심기능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김정연, 1999; 성주인 등, 2008; 이재준 등, 2010), 모든 읍면소재지를 사업추진 대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중심지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일정 계층 이상의 농촌중심지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사업추진의 대상이 되는 중심지 계층이 낮아질수록 농촌주민들의 편의성과 수혜도는 제고될 수 있지만 정책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중심지 계층이 높아지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수위중심지인 시·군청소재지를 제외하면 1~2개의 읍·면소재지가 제2계층 중심지로서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중심지 정책추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들 중심지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제3계층 이하의 하위 중심지들은 기동성이 약한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배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심지 계층별 서비스기준(Service Standards)을 설정하여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성주인 등, 2008, 129-130).<sup>11)</sup>

시·군지역이 대도시 연계권, 지역거점도시 및 중소도시 연계권, 자체생활권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 대도시 및 지역거점도시 등의 연계권인 지역의 중심지는 도시화 압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상위 중심지 중에는 제1계층 중심지가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자체생활권 지역의 상위 중심지는 주로 제2계층에 해당하고 배후 마을에 대한 지원기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변도시 연계권에서는 수위 중심지에 복합적인 기능의 고급시설을 복합하고, 자체생활권 중심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거점역할 강화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송미령 등, 2008; 성주인 등, 2008, 132-133).

10)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명칭을 ‘농어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1) 영국에서는 마켓타운의 인구규모를 10,000명에서 25,000명 이하인 마켓타운과 2,000명에서 10,000명 미만인 마켓타운으로 구분하여 시설배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http://www.defra.gov.uk/rural/ruralwp/whitepaper/default.htm>).

#### 4.3. 대상사업의 재구성과 소프트화

농촌중심지는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 개발거점, 교통결절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지역으로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정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촌중심지정비 대상사업을 정주·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지역역량 강화 등으로 확대하여 재구분하고,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주·환경 부문의 사업에는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적 기업방식의 주택관리사업(두꺼비하우징,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의 대안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사업,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형 도시설계사업(도시·옥상녹화, 재활용사업,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산업·경제 부문에는 중심상점가 및 전통시장 재생사업, 쇠퇴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상업 거점지구 형성사업 등의 관행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취로애로계층 고용·교육훈련, 기업지원 등의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부문에는 문화·평생학습(문화 바우처 사업, 평생학습원 등), 보건·의료사업(종합건강지원센터, 의료생활협동조합사업 등), 정보·커뮤니케이션(마을방송국, 마을신문 등) 등의 사업을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장원봉, 2012, 201-202).

나아가서 최근 6차산업화, 지역순환형 경제체계의 구축, 지역식품체계(Local Food System) 구축, 체험·휴양마을의 네트워크화, 지역농산물 가공·유통 거점의 형성 등 배후 농촌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농촌중심지에 거점을 형성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4.4.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첫째, 계획수립·추진 절차 또는 단계를 유연화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 상향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지자체의 기획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민의 제안서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최수명, 2012, 36).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제안서 작성을 현재와 같이 계획수립자(용역사 등)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행

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와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수정·변경이 최소화되고 사업 추진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대안은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제출하면 도와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및 예산반영이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전체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의 위치·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정·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촌중심지정비계획은 전략적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구상과 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상위계획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서는 계획기간(4~5년)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적인 내용구성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슬림화한 계획서의 구성이 되도록 하되, 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의 기능중심의 개별화된 사업계획 수립방식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수립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급적 복합·융합·연계하여야 하고, 이들 시설이 집중되는 중심지가지에 대해서도 압축적인 개발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의 중시지에 각종 기능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보다는 주변 중심지와 기능 분담하여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김정연 등, 2010).

넷째, 각각의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그 위치,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기능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 보다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개발여건(해당 사업을 둘러싼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 등), 기본구상(필요한 경우 수요예측, 도입기능, 도입시설의 규모 추정 등을 포함), 세부사업계획(세부사업내역과 그 산출 근거 제시), 추진 주체와 운영·관리계획(필요할 경우 이 사업의 근거법 조항도 제시),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중심지 주민



들이 중심지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발전협의회의 소위원회 중의 하나를 주민 중심으로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방안과, 읍면발전협의회와 별도로 주민 자율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주민의 주도성 확보와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농촌중심지종합정비사업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선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Help Desk, 도시닥터 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기초생활권발전정책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농촌중심지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포괄보조금제도의 장점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창의적인 농촌중심지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정책 추진경험이 일천하여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권 유형별 중심지 대상의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 정책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그 계획 수립·추진 방식을 평가하고 나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첫째, 그 목적과 추진방향에 있어서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중심기능 활성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둘째, 대상지역에 있어서는 도농복합시의 시청소재지는 제외된 반면에 모든 읍·면소재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대상사업은 기초생활기반 중심의 시설·공간계획 위주로서 다양한 정비수요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추진체계에서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주도성을 확보를 중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수단이 결여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도농복합시의 시청소재지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농촌중심지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중심지 계층별·지역유형별로 차별적인 정비방식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농촌중심지정비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중심기능 향상 외에 거점기능 및 결절 기능 강화를 포함하되, 특히 최근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경제활동

다각화를 건인하는 활동거점으로서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농촌중심지정비사업은 전략적 실행계획으로서 이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상위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시·군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농촌중심지정비사업의 목적 변화에 맞추어 대상사업도 정주·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의 부문으로 확대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근린재생형의 다양한 소프트사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단축·유연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계획의 내용을 전략적 실행계획 성격에 맞게 슬림화 하는 방안과 각종 사업을 장소기반적으로 복합·연계하되, 컴팩트화 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항목의 추가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의 수정·보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도 하의 농촌지역형 기초생활권 중심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를 위한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제안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초기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추진실적과 성과를 파악할 수 없었고, 관련 문헌 검토 및 전문가·행정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성적인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의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과의 비교 분석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향후 농촌중심지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실적과 경험의 축적에 맞추어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3. 18,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자료.
- 김정연, 1999, 충남지역의 도시체계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 권오혁, 2002, 지방활성화와 소도읍 육성, 국토정보.
  - 박종철, 2009. 12,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19-40.
- 등, 2010,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2005,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 ,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시범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공사, 2008,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 2012,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 성주인 등, 2008, 국토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등, 시 · 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인혜, 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대호 등, 2008, 농촌마을리모델링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Ⅱ)-, 농어촌연구원.
- 이성근 외, 2009,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 평가 ·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소도읍육성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이재준 등, 2010, 기초생활권 중심지 계층별 적정 서비스 공급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장원봉, 2012, 근린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와 사업 방식: 근린을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길 모색,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한울, 196-231.
- 최수명 · 이행욱 · 김홍균, 2003, 농촌지역 중심지 기능변화에 따른 정주체계 모형설정, 농촌계획 9(2), pp.39-47.
- , 2012. 10. 9, 농산어촌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발전방향 연구-최종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상생 포럼(살기 좋은 농촌분과).
- 최양부 · 정철모, 1984. 농촌지역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Ⅰ: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 관리용역, 국토해양부.
- 행정안전부, 2010, 11년 특수상황지역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http://towns.org.uk/>
- <http://www.defra.gov.uk/rural/ruralwp/whitepaper/default.htm>
- [http://www.ecovast.org/english/strategy\\_e.htm](http://www.ecovast.org/english/strategy_e.htm)
- <http://www.ncruralcenter.org/smalltowns/initiative.htm/>
- Jack, Schultz(2004), Boom Town USA: The 71/2 Keys To Big Success in Small Towns, Herdon : National Association of Industrial and Office Properties.
- The Countryside Agency, 2002, Market Towns Healthcheck Handbook.
- Action for Market Towns, March 2005, Market Towns Healthcheck Handbook.

### Ⅲ. 부록 1 :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메뉴얼



# Chapter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 I

1. 사업개요
2. 모니터링
3. 컨설팅
4. 평 가



## 제1장 사업 개요

### 1-1. 추진배경 및 목표

-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따라 본 사업은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1-2.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 관련 근거 : 붙임 참조

### 1-3. 추진방향

- 자연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 정비

- |         |   |
|---------|---|
| · 마을    | 지역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재개발, 이주희망 도시민 등이 추진하는 신규마을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기반유지                   |
| · 소생활권역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 · 읍면소재지 |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 읍면소재지 역할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읍면소재지에 적정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기능 향상을 도모 |
| · 도심지   | 주거 밀집지역의 낙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및 경관개선 등 추진   |



※ 특히, 도농통합시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 서비스 연계성 확보에 유의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지원 강화
  -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개발 경험자, 지역개발 전문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마케팅 등 강화
  -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
- 마을단위 등 소규모 공동 소득 지원사업 추진
  - 마을 소득확충을 위한 시설, 브랜드 개발 등 강화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
  -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지정을 받은 사업
  - 유사사업의 통합으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기초서비스 기능분담 및 연계발전을 유도
  -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및 시설복합화 유도
- 시·군 전체의 『나누어먹기식』 사업을 지양, 거점·권역 집중개발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 1-4. 적용범위

##### 가. 유형별 사업종류

유형별 사업		기능별 사업
①	읍면단위 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②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강화
③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④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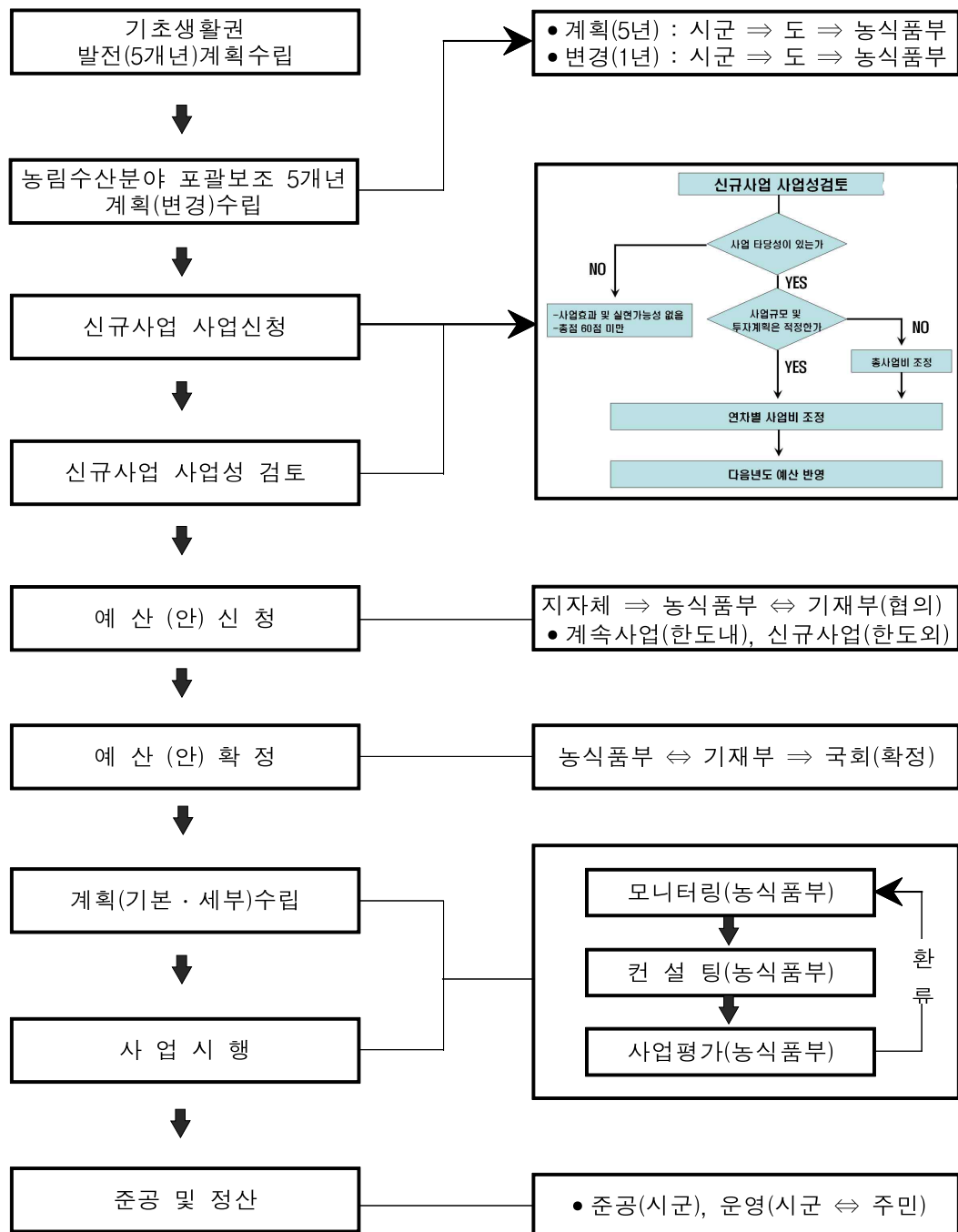
## 유형별사업 주요내용

구 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
【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Ⅰ-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경관개선으로 분류 * 소득사업은 지양 ○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2013년부터는 면단위는 70억원	<통합된 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
	【Ⅱ-1】 권역단위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지원조건(5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 2013년부터는 25~50억원	<통합된 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산촌생태마을조성 ·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Ⅲ】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Ⅲ-1】 신규마을조성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통합된 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Ⅲ-2】 기존마을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통합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Ⅳ】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Ⅳ-1】 농촌생활환경 정비	○ 지원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 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 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 발 등의 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 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 농촌농촌체험마을사업 · 어촌체험마을사업 ·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사업 등
	【Ⅳ-2】 농업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 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Ⅳ-3】 마을공동소득 창출 및 문화조성	○ 지원내용 - 마을공동소득창출, 마을공동문화조성 ○ 지원조건(2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소득창출 5억원, 문화조성 2억원	<통합된 사업> · 없음 * 2013년부터 신규시범사업

## 나. 기능별 사업종류 및 내역

사업의 종류	사업별 주요내용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li> <li>-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정보화시설 등</li> <li>- 농산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li> <li>-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li> </ul> </li> <li>※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 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li> <li>○ 지원제외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li> </ul>
② 경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li> <li>- 농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에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사업</li> <li>-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li> </ul> </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10가구 이상의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li> </ul> </li> </ul>
③ 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임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li> <li>- 지역의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 소규모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시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li> </ul> </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li> <li>-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부담</li> </ul> </li> </ul>
④ 지역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li> <li>-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li> <li>-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li> </ul> </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다음연도 예산신청액의 10%범위 내에서 신청가능(기본계획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li> </ul> </li> <li>○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송비 등)와 종합사업(하드웨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외의 S/W 단독사업은 지원제외</li> </ul> </li> </ul>

## 다. 일반농산어촌 사업시행체계



## 라. 지원제외 대상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생활기반구축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36조 관련)>

1. 일반여권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 나. 장애아동 교육지원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논농업 직접지불
  -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 나.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지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지원
5.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 나.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지역에너지 개발
  - 나. 석탄 비축 및 진흥지구 개발지원
  - 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시설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 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항 단서)의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발취)

사 업 명	사 업 명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7.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8. 지역정보화 지원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9. 자전거도로 정비	90. 노인시설 운영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21. 공공도서관 운영	92. 아동시설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	105. 사회복지관 운영
23. 문화의 집 조성	113.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117. 재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118. 결연기관 PC구입비
29. 조각공원 조성	119. 사회복지관 기능보관
31. 문화학교 운영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130.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36. 문화의 거리 조성	139. 담수어 침단양식장 시설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145. 수산물 위생안전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149. 양식기반시설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150. 마을어장 개발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기술 개발비 지원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157. 친환경 화장실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158. 개발기술 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81. 경로당 운영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162. 임산물 유통·가공

○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 등에 맞지 않은 사업

- 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 축사의 경우는 지원가능(축사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② 마트·슈퍼 등 판매시설의 설치·관리비
  -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 ③ 숙박시설·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관리비
  -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박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의 설치비는 허용(체험·관광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으로 이용시는 지원 불가)
- ④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 등 구입비
  - \* 다만, 장비는 시설에 부착된 설비성격의 장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허용
- ⑤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농약·비료·종자·부직포·파이프·비닐 등) 구입비
- ⑥ 정미소·미곡종합처리장·산지유통센터·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관리비
- ⑦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장비 구입비
- ⑧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축물의 관리기간 내 철거 및 리모델링비(신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도 지원 제외)
  - \* 다만, 시·군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경우는 가능
- ⑨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조성비(측량·분할·관련 세금 등) 및 구입비
  -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 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 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2014년부터는 지원 제외)
- ⑩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및 마을기금 조성비
- ⑪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신규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 ⑫ 타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예 : 마을기업 등)인 경우 동일 항목의 사업비(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홈페이지 구축비,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체

## 1-5.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지역

-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는 120개 시·군에 대해 지원(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 현황 : 별첨 참조)
- 시군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도의 군은 제외) 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과 성장촉진지역(개축지구지원, 도서종합개발)은 국토해양부로 사업신청
-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372개 개발대상도서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은 행정안전부로 사업신청

### 나. 시행주체 및 보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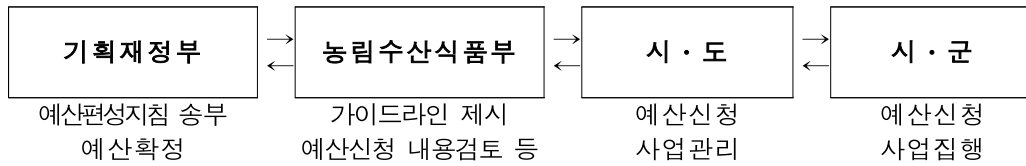
- 사업주체 : 시장, 군수
- 통합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통합보조율 적용
- '10년 신규대상 지구부터 적용
- 기존 계속사업(2년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새로운 통합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보조율 적용

### 다. 예산신청 및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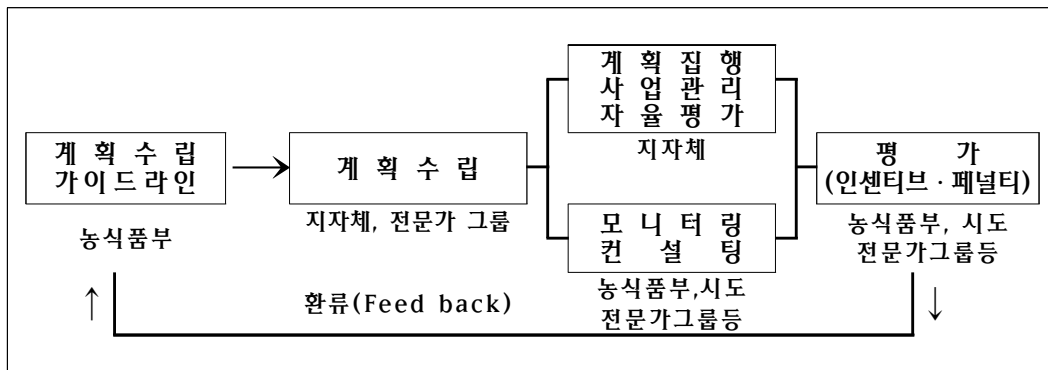
- 시군구는 예산신청시 유형별·기능별에 따라 예산을 신청
- 시군구는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 시군구는 예산신청시 지역발전 계획, 관련사업 중장기 계획, 계속지구 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청
- 시군구는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예산신청 및 집행 흐름>



### <사업 추진 체계도>



## 제2장

# 모니터링

### 2-1. 목 적

- 포괄보조금 제도에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기정착 유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 성과목표, 사업진행 상황 등의 자료수집을 통해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 2-2. 추진 방향

-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모니터링 시행
- 정기모니터링 결과 사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현지 출장 점검 실시

### 2-3. 중점 수행사항

-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
  -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 등 사업추진체계 · 작동 현황
-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내용 확인
-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성과목표, 지표 달성 가능성
  -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성과, 비전 및 발전 방향 등
- 사업 추진 상황, 우수 부진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 지역주민 갈등, 민원, 감사 지적 등 처리결과 확인

### 2-4. 기대효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성과 목표, 지표 등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 가능
- 우수 성공모델 발굴 · 홍보로 정보 공유

## 제3장 컨설팅

### 3-1. 목적

- 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시 농산어촌 지역발전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으로 알차고 충실한 계획수립 도모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비전설정 및 계획 수립,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등을 중점 지원
- 모니터링에서 사업추진 및 운영이 미흡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실시

### 3-2. 주요 내용

- 계획서의 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컨설팅
  - ※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
- 지자체내 타 사업 및 타 시·군과의 연계성
-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 설정에 따른 계획수립,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세부 사업 및 실행계획 등 구체적 제시)
- 사업 추진 취지 및 추진방향에 맞는 계획수립
- 발전방향, 성과지표, 사업우선순위, 서식 준수 등 종합검토
- 사업추진상황,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 3-3. 기 타

-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 지자체의 계획수립 컨설팅 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운영체계 가동
  - 현재의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그룹을 확대·개편하여 운영
  - 지역별로 지역개발 전문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시 지원체계 마련
-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지구에 반영된 역량강화사업비(S/W)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

## 제4장

# 평 가

### 4-1. 추진배경

- '10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종전의 균특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
-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
  - ※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
- 지역위는 매년 5월말까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보고(시행령 제13조)

#### ◆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평가 추진체계

- 시군/시도(실적보고서 제출) → 광역위 검토 → 부처 평가 → 지역발전위원회 최종확정 → 기획재정부(차년도 예산실링 증감)

### 4-2. 평가목적

- 광특회계 지역계정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 제시
- 지자체는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4-3. 평가 실시

- 평가등급은 사업군별 5단계 상대평가 : S(10%), A(15%), B(50%), C(15%), D(10%)
- 평가자료는 시군의 REDIS([www.redis.go.kr](http://www.redis.go.kr),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인센티브 지급, 부진시군은 예산 삭감(지역위)
- 농림수산식품부는 평가결과를 신규사업 대상 선정시 반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세부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등

## 일반농산어촌(120개 시군) 지역현황

구 분	120개 시·군
경 기 (9)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11)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15)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21)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22)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18)	창원시(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제 주 (2)	제주시, 서귀포시



## Chapter

## II

#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1.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2. 음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3. 기본계획 수립
4. 시행계획 수립
5. 사업시행
6. 유지관리

[부록]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제1장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1-1.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읍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2. 법적근거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9조
-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준용

### 1-3. 사업추진 방향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를 발굴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명소화를 추진
- 읍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으로 지원
- 지자체의 능동적인 조정으로 분산 추진되는 각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
- 지자체가 지역주민, 지역리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 1-4. 사업대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의 읍·면 지역 중 읍면소재지의 중심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등에 제약요인이 없거나 해제가 가능한 지역
- 현재 지역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거점공간으로 서비스기능 향상이 가능한 읍면소재지 지역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기 선정된 지역은 제외(소도읍 육성사업시행 및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역 포함)

## 1-5. 사업내용

### 가.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기능별 사업을 참고하여 시행가능하나, 읍면소재지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시행
  - 기초생활기반 :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정비, 다목적복지회관, 운동휴양시설 등
  - 지역소득증대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래시장 시설개선 등
  - 지역경관개선 : 경관계획수립, 지붕·담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비, 컨설팅, S/W프로그램(시설물 운영관리 등), 기본계획비 등
- \* 단,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총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시행가능하며,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등의 부대경비 포함시 10% 초과 가능

### 나. 지원조건

- 사업비의 지원은 지구당 4년간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 '13년 신규 신청지구부터(읍소재지 : 100억원 이하, 면소재지 : 70억원 이하) 적용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
  - 경관개선 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 단, 주요 신규 사업 사업성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하며,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표 II-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조건

구 분	지원 한도	사업 기간
~'09년 선정(~'10착수)	70억원 이내	3년간
'10년 선정('11착수)~'11년 선정('12착수)	100억원 이내	4년간
'12년 선정('13착수)~	읍:100억원 이내, 면:70억원 이내	4년간

[표 II-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지역경관개선	소득기반	재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시장정비 등
	도시경관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S/W)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지역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 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 운영관리 P/G 지원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 1-6.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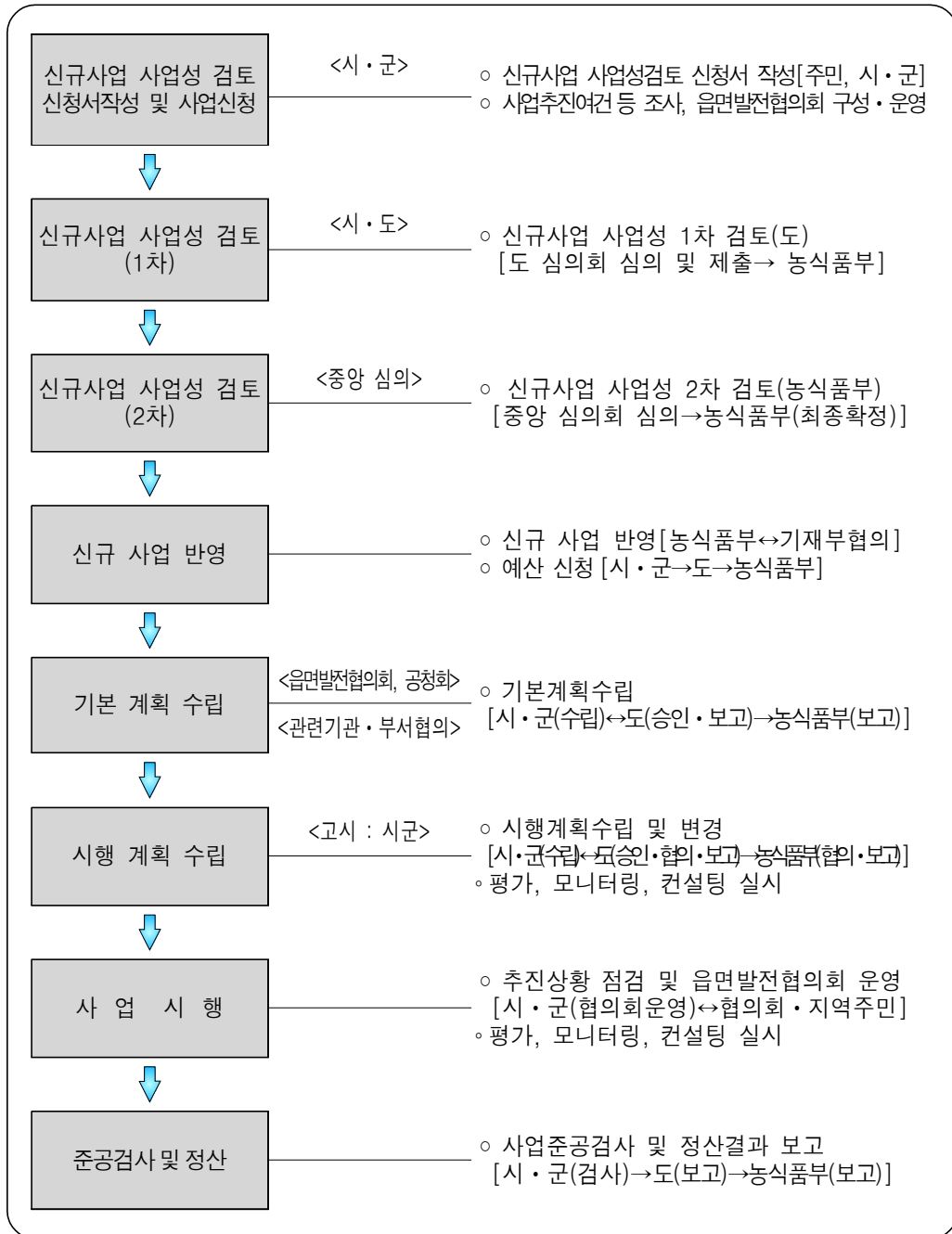
### 가. 시 행 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읍면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탁 시행 시에는 가능한 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나. 기관별 역할분담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 시달, 전년도 사업 부처평가(지역위 주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2차), 시행계획변경(기능별 총 사업비의 50%이상 또는 사업취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 도지사 : 예산신청, 신규 사업타당성 검토(1차),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 시행계획변경(기능별 총 사업비의 20%이상 ~50%미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 \* 협의 실적(건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분기별로 보고(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시장·군수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서 작성 및 사업검토신청, 예산신청,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신청(도),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신청(도), 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승인·준공 및 정산,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한국농어촌공사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안)작성 등 기술지원(세부 설계, 공사감리, 사후관리 등),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기술지원,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 지역주민 : 해당 읍면발전협의회 참여, 신규사업신청서 작성 시 참여 및 협조, 시설물 운영·관리, 지자체의 시설물 운영·관리지원

## 다. 사업추진체계



[그림 II-1] 사업추진체계

## 제2장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가. 목 적

-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내의 전문가, 지역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 나. 필요성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이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실천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지자체의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지역주민 지원·협조)을 지원하고 읍면소재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지역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읍면소재지의 발전목표(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시행,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 다. 구 성

- 시 기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익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신청하기 이전
- 구성원 : 사업지역의 마을대표, 여성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축협, 해당 읍면소재지 상가변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시장·군수 등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협의회 회장 : 민간전문가 및 (부)시장·(부)군수 공동 협의회장
  - 구성 및 운영책임기관 : 시·군

## 라. 주요기능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읍면소재지의 중장기적, 거시적인 발전방안 등 자문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 자문·지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 단계별 다음의 내용을 협의·지원
  -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 수시 협의 지원
  - 계획수립자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 협의회 결과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서에 반드시 수록
  - 주요 협의·지원 내용
    -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 지역발전 비전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협의
    -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 마. 기타

-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대상지역별로 당해 지역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전담자문가로 위촉
  - 지역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 활동
-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지원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사례  
공동위원장 (군) : (부)군수  
공동위원장(민간) : ○○대학교수(○○○)  
위 원(공공분야) : 도의원,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위 원(민간분야) : 대학교수(경관분야), 여성농업인대표, ○○면 번영회장, ○○면  
로터리클럽 회장



## 제3장

# 기본계획 수립

###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기본계획서 2부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역량강화사업을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가. 기본계획서 포함내용

- 신규 사업신청서와 신규 사업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지역현황 분석
  - 주민수요조사 및 지역잠재력(SWOT) 분석
  - 지역발전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계획, 지역경관개선계획, 지역역량강화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나. 기본계획서 기술내용

- 지역현황 분석 : 지역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생활환경현황, 경관현황분석, 자원분포현황, 관련계획검토, 주민의식조사, 개발수요분석, 읍면소재지 중심지 기능분석, 읍면소재지 이용도분석, 읍면소재지 거점시설 기능분석, SWOT분석 및 개발과제를 도출함
- 기본구상 : 지역의 중장기비전 도출,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체계 및 공간구상(토지이용 구상),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선정, 발전지표를 제시
- 부문별 기본계획 : 최종 선정된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기능별로 사업내용을 기술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투자계획, 운영관리계획, 모니터링 등 계획을 마련

###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 가. 지역현황

- 신규 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지역의 모든 현황을 수록하기 보다는 읍면소재지의 기초자료(인구, 지형, 지세, 농림어업, 토지이용, 용도지역, 지역경제, 기초생활 등)는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읍면소재지 장기발전 및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자세하게 기술
- 사전환경성검토는 시행계획 단계에서 시행하며, 환경현황 조사 후 작성

#### 나. 기본구상

- 개발여건분석 : 지역자원, 잠재력분석, 제약조건, 개발수요 조사결과와 더불어 관련 상위계획 등의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과제를 도출
- 개발과제가 도출되면 장기비전(개발목표)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읍면소재지의 주요 개발체계(축) 및 공간별 개발구상을 설정
- 최종적으로 도출된 사업계획을 전략사업 선정원칙과 선정기준에 따라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나누고, 읍면소재지의 중장기 주요 개발지표를 설정

## 다. 부문별 계획

- 보고서 기술 순서는 기능별로 구분 작성하여 기본구상과 서로 연계되도록 함
- 지자체, 타 부문 연계사업 내용도 수록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시설계획은 각각의 위치,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기능별 사업비 투자계획 순으로 작성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소득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및 기초생활기반 시설위주로 계획
-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 사업에 한하여 지원
  - 경관개선 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시설계획 시 공종별 시공재료 및 필요시설 등을 표기하고 개략 평면도를 제시하여 세부설계 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함
- 지자체별 조례 등의 제정으로 사업계획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강원도의 경우 경관형성계획 포함)과 단가적용 시 사업 공종별로 세부내역을 표기
- 용도지역, 국가하천, 국도 등 관련 법규에 적절한 사업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계획부지에 시설계획 시 장애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
  - ※ 예 : 계획부지에 도시가스관, 광통신망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경우 시공 어려움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실거래가 위주로 반영하고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라.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단일시설은 가급적 당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설계비 등의 대상액은 주민자부담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표 II-3] 기본계획서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개발여건	계획 수립 개요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계획수립의 범위, 계획수립 추진경위, 계획수립의 수행체계 등
	지 역 현 황	지역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지역인구분석, 생활환경현황, 경관현황분석, 환경현황분석, 토지이용현황, 산업경제현황, 지역조직현황, 지역자원현황 등
	개발 여건 분석	개발수요조사, 관련계획분석, 읍면소재지 중심지 기능분석, 읍면소재지 이용도분석, 읍면소재지 거점시설 기능분석, 제약요소 및 기회요소, SWOT 분석 등
기본구상	목 표 및 과 제	중장기 비전도출, 개발목표, 추진전략 등
	개발체계 및 공간구상	주요 개발체계(축) 설정,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전략사업 선정, 연계사업 선정 등
	개발 지표 선정	목표인구지표, 상수도지표, 하수도지표, 도로포장율, 방문객 지표, 공원녹지비율, 주차공간지표 등
개발계획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문화복지회관,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지 역 경 관 개 선	재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 시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계획수립, 테마가로조성 등
	지 역 역 량 강 화	교육훈련(지역주민, 지역리더, 선진지견학), 마을홍보(축제 활성화, 문화복지P/G, 시설물운영P/G), 부대비용(기본계획, 세부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 업 비 투자계획	투 자 계 획	사업비 재원별 내역, 기능별 투자계획, 연계사업 투자계획, 부대비용 산출내역, 사업별 편입용지, 계획시 행정사항 등
	집 행 계 획	사업투자 기본방향, 투선순위 결정방법, 사업투자 우선순위
	기 타 사 항	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계획 등

##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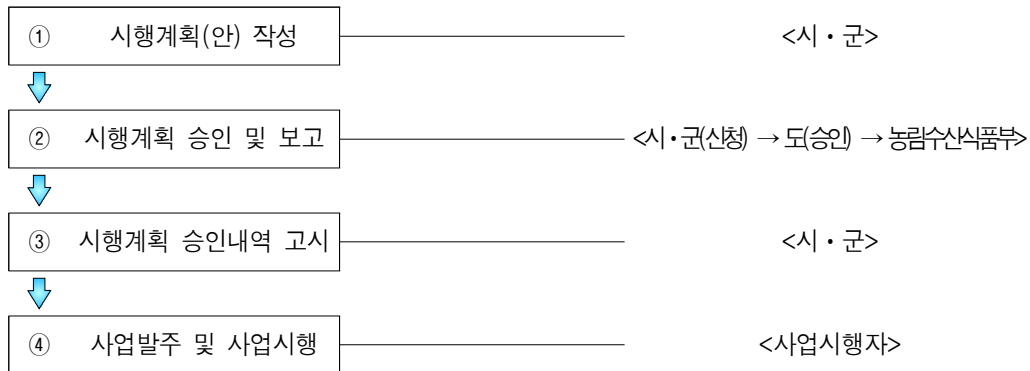
# 시행계획 수립

###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구상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 시 의견수렴 내용을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또는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읍면발전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침
  - 시행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로 분리하여 계획수립이 가능.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시장·군수는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농림부 사전협의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50%이상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 도 사전협의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50%미만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단위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4개기능: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그림 11-2] 사업시행 추진절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고시

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활용도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별 시행계획을 수립

####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2. 사업시행계획개요
3. 기능별사업내역
4. 사업비수지예산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
6.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7.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8.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읍면발전협의회회의견서
9. 시행계획관련 증빙서류(토지대장 등)



## 제5장

# 사업시행

### 5-1. 사업시행절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설치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관리, 편의성을 지역주민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공유 재산 매입절차에 따른 의회 승인사항에 속하는 용지매수보상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용지매수 보상을 추진토록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발주와 병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5-2. 사업발주 요령

#### 가. 일반사항

- 사업시행자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일괄 또는 부분 수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수탁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발주 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H/W부문과 주민교육, 컨설팅, 마케팅, 정보화 등 지역역량강화부문(S/W)을 분리하여 발주
- 지역역량강화부문에 대하여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한국농어촌공사 발행)을 참고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전기, 통신공사를 제외한 H/W공사는 일괄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부분 발주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분은 예산집행(입찰) 잔액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 나. 사업발주 방법

### 1)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 발주할 경우



[그림 II-3] 사업발주 체계도(시장·군수)

- H/W사업의 발주시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29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
- 사업시행자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시설중심의 H/W사업 발주시 [그림 II-3]과 같은 추진체계로 사업을 발주
- 입찰공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내용)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집단적인 간판정비 등)사업 등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은 주민 자부담을 확보한 후 사업시행자가 발주함을 원칙으로 함

■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사업 추진방법(예시)

- 사업비를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추진
  - ① 주민 자부담금 시·군 계좌로 입금
  -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정산
-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외의 협상 계약은 발주자 자체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일괄 위탁하여 사업 발주할 경우

○ 위탁시행자는 H/W사업을 발주시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로 사업발주를 함



[그림 II-4] 사업발주 체계도(위탁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시행세칙(제13차 개정 2008.1.1)

제105조(계약의뢰)

① 계약의뢰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용역)명 또는 물품명
2. 공사(용역)개요 또는 용도
3. 설계금액(지급자재대 별도 표시) 또는 예산액과 예산비목
4. 공사착공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용역기간 또는 납품희망일
5. 입찰참가자격, 면허요건 등 수행자격요건
6.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의견
7.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8. 현장위치도 또는 납품 장소

9. 현장설명서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11.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

12. 공사 보험가입대상공사의 보험가입여부 및 그 사유

13.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1호의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가격평가사례)

#### □ 입찰가격평가 사례

○ 예정가격 100억원, A사 90억원, B사 70억원, C사 60억원, D사 50억원으로 투찰한 경우

⇒ A사 :  $\text{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 \div \text{당해입찰가} = 20 \times 50 \div 90 = 11.11$

⇒ B사 :  $\text{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2 \times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당해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추정가격의 } 60\%)] = 20 \times 50 \div 80 + [2 \times (80 - 70) \div (80 - 60)] = 13.50$

⇒ C사 :  $\text{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2 \times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당해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추정가격의 } 60\%)] = 20 \times 50 \div 80 + [2 \times (80 - 60) \div (80 - 60)] = 14.50$

⇒ D사 : C사와 동일 → 14.50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사업시행중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5-4. 사업의 준공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연차별공사 또는 계속공사계약에 의하여 추진된다.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절차와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 65조 내지 제67조에 근거하여야 함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준공검사 요청시에는 공사감리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예비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공통적으로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도면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내역서
  3. 시설물 배치 및 시설현황도
  4. 주요시설물 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6. 시행전후 면적조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등이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정산을 한다. 이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

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 인수인계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 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할 수 있음



## 제6장

# 유 지 관 리

### 6-1. 유지관리 목적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경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6-2. 유지관리 방향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시설물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체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 6-3. 유지관리 범위

- 유지관리의 범위는 각 시설물을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보수, 개량 등 일련의 활동사항으로 함
- 각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각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등 시설운업을 위한 전문가 및 지원그룹의 컨설팅 등을 유지관리계획에 포함

### 6-4. 유지관리 체제

- 지자체와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운영위원회 및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협의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해 조정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구축
  -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결성하여 운영
- 유지관리협의회는 유지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유지관리 관련분쟁의 조정, 지자체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협의회 의결을 거쳐 각 시설별 유지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기준을 정함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운영위원회를 구성

### 6-5. 시설물 운영방법

#### 가. 기본방향

- 시설물 유지관리는 결함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결함의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의 합리적 대처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유지관리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 나. 일반사항

-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기능, 운영(활용)방안, 구조, 규모 등의 제원을 정리·파악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용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물 기능 유지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에 유의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 인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 유지관리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요제원,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세밀하게 기록, 관리
- 유지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구성항목별로 관리
- 마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통신, 가로등시설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지역내 타사업 계획 및 시공시 활용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별첨 1]

## 사업시행계획 개요

☐ 대상지역의 범위

- 위     치 : ○○도 ○○군 ○○면 ○○리
- 권역규모 : 법정리, 행정리, ○○마을
- 면     적 : ○○ha(도시지역:○○ha, 관리지역:○○ha, 농림지역:○○ha, 자연환경보전지역:○○ha)
- 가구·인구 : ○○호(농가 : ○○, 비농가 : ○○), 인구 ○○명)

☐ 사업기간 : ○○○○년.○○월 ~ ○○○○년.○○월

☐ 총사업비 : ○○백만원(보조○○, 자부담○○)

구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별첨 2]

## 기능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증감 내역		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계							
○○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소계							
○○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소계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소계							
○○사업							

[별첨 3]

## 사 업 비 수 지 예 산 서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A)	시 행 계 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국 비						
지방비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A)	시행계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공사비						
-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별첨 4]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구 분	총 괄 계			
합 계	기본계획(A)	시행계획(B)	증감(B-A)	증감사유

[별첨 5]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사 업 명	검 토 의 견



[별첨 6]

## ○○시(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주요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

##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 시행계획수립
- 
- 

### 3. 주요변경내용

- 
- 

#### 4. 변경사유

- 
- 

## 5.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변경내역

(면적 : m<sup>2</sup>)

기능별	단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내역	증감사유
합 계		건	건	건	
◦ 기초생활기반확충 - - -					
◦ 지역소득증대사업 - - -					
◦ 지역경관정비사업 - - -					
◦ 지역역량강화사업 - -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하여 작성

## 6.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고
합 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고
합계				
◦ 공사비 -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7.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 IV. 부록 2 : 2014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추진계획



---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

#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

---

2012.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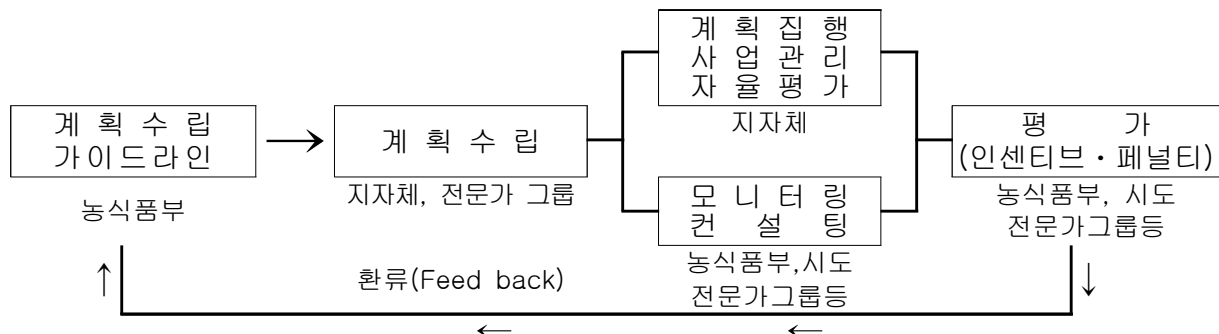


# I. 추진 경과 및 개요

## 1 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 추진경과

- 2009년도에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인 포괄보조제도를 도입 추진(균특법 개정, 2009.4.22)
  -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200여개 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폐합
    - 중앙부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의 한도를 지자체 별로 배분하면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편성·시행이 원칙이나,
    - 현장의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및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어 자세한 지침을 요구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안 마련(2010.4.24)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주체 및 협조체계를 구축
  - 기존 사업의 유형화, 사업시행 프로세스 구축 등 포괄보조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화

### [ 사업추진 체계도 ]





## 2

## 신규사업 추진개요

- 2013년 예산편성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각 한도액을 배분
  - 계속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재부가 배분
  - 신규사업은 우리 부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제출

\* 예산('13, 지역계정) : (계속) 8,185억원, 89.1%, (신규) 997억원, 10.9%

### 〈금년 적용 신규사업성 검토방법 및 일정〉

#### 【주요 검토방법】

- 사업유형 : 읍(동)면·마을권역단위정비, 신규마을조성, 아이디어, 역량강화사업
- 검토방법 : 2단계[도(농관원), 농식품부] 검토, 100점기준(도 평가 30점 포함)
  - 외부 전문가 참여 집중 정성평가(6개 팀 24명)
- 검토지표 : 유형별 검토지표 설정
  - 상위계획의 연계성(30점), 사업별 타당성(70점), 가감점(±5점)
- 사업성 여부 결정
  - 일정점수(60점) 미만 해당사업
  - 치유할 수 없는 결함(요건미달, 법적인 결함 등)이 있는 사업

#### 【주요일정】

- '12. 11월 : 신규사업성 검토 가이드라인 지자체 통보
- '13. 1월 : 신규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
- '13. 2월 : 사업계획서 도(道) 검토
- '13. 4월말~연도말 : 중앙 검토 및 시군별 예비권역 자체 역량강화 추진
- '13. 5월말 : 예산신청(한도외, 지자체 → 농식품부)

## II. 추진현황

### 1 추진 실적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접경지역 시군, 도시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제외한 기초생활권역중 120개 시군에 추진

\*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행안부, 인구 50만 이상 31개 시군은 국토부가 담당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과거 4개 유형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총 1,114개소에서 사업을 시행중

\* 읍면정비 : 144개소, 권역단위 : 375, 신규마을 : 105, 기초인프라 447

- 연도별 예산 : ('10) 9,737억원 → ('11) 9,312 → ('12) 9,305 → ('13P) 9,182

### 2 추진 성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사업)은 통·폐합되기 이전에는 내역사업으로 382개소가 추진되었고, 이후 561개를 추진중

- '10년 이전에는 연평균 55개소, 이후에는 187개소의 사업을 시행

- '12년까지('03~'13) 읍소재지의 84.4%, 면소재지는 15.9%, 마을(里)은 11.2% 수준 개발사업 추진

시 도		시·군	읍	면	리	비 고
전 국		159	216	1,188	36,590	
일반농산어촌지역(a)		117	167	1,070	32,883	
개발실적	개소수(b)	117	141	170	3,671	* '리'의 개발실적은 권역당 5.7개 리로 계산
	%(b/a)	100.0	84.4	15.9	11.2	

\* 행정구역은 '12.1.1.기준(면은 1,198개소 중 면장 없는 지역 10개소 제외)

□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 읍면단위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 '04~'12년 기준 읍면종합개발사업 207개소 조성(85개소 준공)

- 소생활권 :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5~6개 마을)하여 소득기반, 생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정비,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

\* '05~'12년 기준 권역단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78개소 조성중(136개 준공)

- 마을단위 : 발전모델로 활용할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정비를 추진

\* '05~'12년 기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119개소 조성(64개소 준공)

□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

\* 생활환경정비 : ('11) 133개소/1,988억원 → ('12) 114/1,833 → ('13) 98/1,269

\* 농촌생활용수개발 등 : ('11) 1253개소/2,196억원 → ('12) 333/1,877 → ('13) 362/1,779

□ 마을개발사업 및 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이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

- 조사 대상 지역(1,064개소)에서 리더 또는 주요 조력자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귀농·귀촌 인력은 494지구(46.4%), 862명 수준

\* 참여형태 : 위원장 159명(18.5%), 사무장 321명(37.2%), 조력자 382명(44.3%)

### Ⅲ. 문제점 및 제도개선

---

① 포괄보조제도 도입취지인 창의적이고, 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해 특성화된 개발 미흡 및 기존사업을 모방·답습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동(洞)” 지역도 포함하여 도농복합시의 농산어촌지역의 중심지 재생 개발을 추진

- 읍면(동)소재지 정비사업 대상지의 인구 증가, 과거 지원사례 등을 종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기 지원한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원 검토

\* “동” 지역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에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미흡

\* 소도읍육성사업은 '04년부터 행안부에서 추진, 2000년 우리 부로 이관·지원되어 2013년 기준 141개(167개중 84.4% 수준) 선정 지원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의 **컨텐츠를 다양화**(경관, 공동소득, 문화, 운동 등) 하고, 마을단위 사업중 체험마을 조성사업 확대는 지양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마을공동문화 조성 및 소득창출 사업 추진

\* 마을공동문화조성(2억원 이하), 마을공동 소득창출(5억원 이하)

- 소공원, 마을 및 도로인접 경관개선 등 **다양한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 S/W 사업지원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20억원 이하), 시군지역 역량강화 사업(5천만원 이하)

○ 신규마을조성 20가구이상 규모의 입주자 모집방식 한정

- 농촌인구 감소와 공동체 형성 지연으로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 (현행) 20세대 이상 12~36억원 → (시범 추가) 10~19세대 5.7억원

②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조물을 신축함으로써 오히려 마을에 부담이 되는 경우 발생

○ 부실한 운영·유지관리를 사전 예방하고, 불확실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검토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제외

\* 신규사업 검토 체크리스트(안) : 붙임 1

○ 현장 모니터링, 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시행착오를 축소

\* 지원제외 및 지원유의사업 현황 : 붙임 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붙임 3

○ 읍면종합정비 사업 및 마을권역 사업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 부여

\* 사업추진 부실, 보조금의 유용·용도의 사용 등 시군의 업무능력·책임감 결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배제

③ 사전 계획성 미흡, 사업성 결여 및 자치단체장의 공약성 사업 등으로 빈번한 사업변경, 지연되어 성과가 미흡하고 예산낭비 우려

○ 색깔있는 마을 육성을 위한 농어촌 현장포럼 개최 및 현장활동가를 활용, 사전 지역의 역량강화를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현장포럼 : ('12) 44개 마을 → ('13) 237개 마을(117개 시군 \* 2개 마을)

\* 현장활동가 운영 : ('12년) 690명 → ('13) 500

○ 사업대상지역 선정 후 단계별(I~Ⅲ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

④ 통합성·일관성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 부재로 환경파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설치로 농어촌 미관 훼손

○ 총괄계획가 제도(Master Planer)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과 지역 주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경관·디자인 검토 지원

\* 2012년 총괄계획가 시범실시 : 7개소(원주, 괴산, 예산, 임실, 진도, 의성, 하동)

○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농어촌 마을경관형성 계획 수립 의무화

수 전문성의 결여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예산의 중복·반복 지원 받음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 확대되어 자립이 지연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과 연계하여 신규사업 신청시 재능기부 활용실적, NGO, NPO 등 전문가 참여 실적을 기재토록 의무화

○ 유사사업이나 타부처 사업(예 : 마을기업)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항목(운영비, 컨설팅비 등)에 대한 지원을 제외

⑥ 각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형별 신규사업 수량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시군에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

○ 농산어촌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별 신청수량 제한

\* 읍면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창의아이디어 사업 등 각 1건

- 다만, 도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 이내의 추가물량을 도에서 특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

\* 예시) 15개 시군인 충남의 경우 시군당 1개소와 도전체 15개대비 20%를 증액한 18개까지 신청가능

⑦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농산어촌 개발 사업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효율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부재

○ GIS를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사업 접수·평가를 추진하고, 과거 지역개발사업의 D/B 구축

- 분석기법 활용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농어촌 개발사업 지원

\* GIS는 데이터의 지리학적 형상을 그릴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GIS에서 지리정보는 명백하게 지리적 좌표의 형태로 묘사되거나, 도로, 주소, 숲 위치 등 함축적 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시스템임

⑧ 산촌 및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추진 미흡

○ 포괄보조제 도입으로 기관별 단독적으로 추진되었던 산촌(산림청)·어촌(수산개발과)마을 개발사업이 권역정비사업으로 통·폐합

- 마을별 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인 마을개발사업이 실현되지 못하여 산림청 및 관련부서(수산개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반영 요구

\* 산촌마을 조성현황 : ('09년까지) 204개소 → ('10) 32 → ('11) 24 → ('12) 26

\* 어촌마을 선정현황 : ('09년까지) 184개소 → ('10) 6 → ('11) 14 → ('12) 2

○ 산촌 및 어촌의 특성을 감안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촌·어촌마을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적극 사업신청

- 산촌, 어촌마을 종합개발 중장기 대책을 참고, 신규사업 선정시 반영

\* 산림기본계획(5차) : (전반기) '08~'12년 30개소/매년, (후반기) '13~'17년 60개소/매년

\* 어촌종합개발사업(2단계) : '07~'13년, 22개소(시도별 1~9개 수준)

## IV. 신규사업 추진방안

### 1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대상

○ 대상 시·군 :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

\* 2013년부터 120개 시군중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가 인구 50만 초과로 국토부로 이관

○ 검토대상 사업 : 8개 유형사업

- 농산어촌사업 유형은「읍면소재지종합정비」,「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신규마을조성」,「기초인프라 조성」,「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시·군 지역역량 강화」,「지자체 연계협력」,「창조·녹색성장」이고,
- 기초생활인프라, 신규마을조성, 지자체 연계사업, 창조·녹색성장 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 <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

◆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읍소재지 : 이미 지원받은 읍(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은 지원 제한

\* 다만, 과거 지원사례, 필요성 등을 감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기 지원한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원 검토

◆ 읍(동)면소재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 시·군당 유형별 각 1개 이내에서 지원

◆ 지역 창의아이디어[경관개선, 마을공동체(소득, 문화), 기타 아이디어사업 등] : 시·군당 유형별 각 1개 이내 지원(총 4개)

◆ 시·군 지역역량강화 : 시·군당 각 1개 이내 지원

◆ 시·군 신청 가능물량 : 최대 8개 수준(신규마을 조성은 추가 가능)

- 읍면(1)+마을권역(1)+지역창의(4)+역량강화(1)+신규마을 조성(1~)



## 2 사업 지원금액

### ○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

사업 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지역창의 아이디어	시·군지역 역량강화
	읍(동)	면				
지원 금액	100억원 이하	70억원 이하	50억원 내외	36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사업 기간	4년간	4년간	3~5년간	1~3년간	2년간	1년간

## 3 사업 신청 방법

- (시·군) : 공간정보시스템(웹주소 추후 공지)에 신규사업계획서  
입력('13. 1. 20. 까지)
  - 제출 기한 미준수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도 검토)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시군별 신규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도 검토 후 사업유형별 순위 및 평가점수 제출('13. 2. 25. 까지)
  - 도 검토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참여방안 검토
  - 도 검토결과 제출시 사업계획서 및 검토지표별 증빙자료 책자  
제출(사전검토 및 중앙전문가 검토용 5부)
- (중앙검토 및 선정)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시군별 신규사업계  
획서를 활용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13. 3월 예정)
  - 시·군 담당직원 및 주민 대표 참여 인터뷰

## 4

## 검토 방법 및 제출

- 검토지표 : 유형별 검토지표 설정
- 검토방법 : 2단계(도·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검토, 100점 기준
  - 도(농관원) 검토(30%)와 중앙 검토(70%)를 구분 : 도에서는 정량적, 중앙은 정량·정성적 검토 집중(도 검토결과는 표준편차 조정 활용)
    - \* 예비계획서 허위 작성 시, 시군의 신청 사업내역 전반에 감점 부여
    - \* 사업 종합검토시 : 주민대표와 해당읍면장 사업설명회 참여
  -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유형 사업에 대한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권역단위 등 전수조사 결과 조치사항 미이행 시·군과 기존사업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이 70%미만인 시군은 신규 사업선정 시 감점 적용
    - 예비계획 사업지구에 대한 역량강화와 함께 사전에 지자체 사업비로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인센티브) 적용
  -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을 위한 농어촌 현장포럼 개최 및 현장 활동가 활용시 가점(인센티브)
- 사업성 검토결과 제외사업
  - 치유할 수 없는 결함(요건미달, 법적인 결함 등)이 있는 사업
  - 타 부처나 유사사업, 제외대상 사업, 중복지원 사업
  - 일정점수(60점) 미만 해당사업 등
    - \* 사업추진 부실, 보조금의 유용·용도외 사용 등 시군의 업무능력·책임감 결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배제

## 5 사업성 검토 결과

- 사업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기획재정부 협의 및 2014년 예산 요구('14년도 광특회계 편성지침에 따라 처리)
- 예비권역은 시군별 자체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1차년도 기본 계획 수립을 내실화 하는 등 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V. 향후 추진계획

내 용	절 차	기 한
신규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군→공간정보시스템	'13. 1. 20.
신규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도	'13. 2. 25.까지
검토결과 제출	도 → 농식품부	'13. 2. 26.까지
신규사업계획서 사전 정량검토	농식품부	'13. 2. 26.~
신규사업계획 종합 검토	농식품부	'12.3.20. ~ 4.20.
예비권역 자체 역량강화	시·군	'13. 4. ~ 12.
'14년 예산신청	도 → 농식품부	'13. 5.

\*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지역위) 일정이 '12년 12월로 앞당겨져 '14년도 신규사업신청 일정을 1개월 순연('12.12.20→'13.1.20)

## 참고 1 | 2014년 신규사업 세부내역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역 계 정 (정 주 환 경 개 선)	1.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읍(동)(100억원), 면(70억원 내외) (국비70%,지방비30%)</li> <li>○ 사업기간: 4년간</li> <li>- 농산어촌 거점 읍면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소재지 종합정비</li> <li>·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CCTV 설치,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등</li> </ul>
	2.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비: 권역당 50억원 내외 (국비70%,지방비30%)</li> <li>○ 사업기간: 3~5년간</li> <li>- 권역당 2개 이상 마을 등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행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li> <li>·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 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공동소득의 증대, CCTV 설치, 그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li> <li>* 사업비는 단계별로 편성</li> </ul>
	3. 신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 소규모 10~19가구(3~5.7억원이내), 20~29가구(12억원이내)~100가구이상(36억원이내) (국비70%,지방비30%)</li> <li>○ 사업기간: 1~3년간</li> <li>-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 분산된 마을정비사업</li> <li>·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전원마을조성 등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및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개발, 분산된 마을의 정비</li> </ul>
	4. 지역창의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비: 20억원 이하 (국비70%,지방비30%)</li> <li>○ 사업기간: 2~3년간</li> <li>○ 시군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li> <li>- 경관개선사업 : 소공원(저수지, 해안가, 산, 들녘 등), 마을경관, 가로경관</li> <li>- 지역공동체사업 : 공동소득, 공동문화 등</li> <li>- 기타 아이디어사업[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귀농귀촌 특화사업, 체재형 주말농장(클라인카르텔) 등]</li> </ul>
	5. 시·군 지역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비: 시·군별 5천만원 이하 (국비70%,지방비30%)</li> <li>○ 사업기간: 1년간</li> <li>○ 시·군 사업추진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내발적 지역개발 동력 확보</li> <li>-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관계자교육, 박람회참가 등 지원</li> </ul>

## 참고 2

## 2013년 대비 개정비교표

구 분	'13년 신규사업	'14년 신규사업	비 고
공 통 사 항	1.신규사업계획신청서 문서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제출 : 중앙 양심의당일 2.일 정 ·신규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12. 2. 29.) ·도(道)검토후 제출(도→농식품부) ('12. 4. 6.) ·중앙검토(농식품부) : '12. 4. 17. ·예산신청(도→농식품부) : '12. 5. 31. 3.기능별 사업규모제한 : 없음 4.사업량 : 시군당 사업별 1개이상	1.신규사업계획신청서 <u>공간정보시스템입력</u>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제출 : <u>도검토</u> <u>결과제출시</u> 2.일 정 ·신규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13. 1. 20.), <u>공간정보시스템 입력</u> ·도(道)검토후 제출(도→농식품부) ('13. 2. 25.) ·중앙검토(농식품부) : '12. 3. 20.~4. 20. ·예산신청(도→농식품부) : '12. 5. 31. 3.기능별 사업규모제한 : <u>있음(읍면)</u> 4.사업량 : 시군당 사업별 1개이하	
읍(동)면소재지 중 합 정 비 사 업	1.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 역경관개선사업 중심 2.지원금액 : 읍소재지 100억원이하, 면소재지 70억원이하 3.사업기간 : 4년간	1.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사업 중심 <u>(주거환경개선사업 추</u> <u>진가능)</u> - 총사업비의 20%이상 지역경관사업 에 투자(경관계획수립 필수) 2.지원금액 : 읍[동]소재지 100억원이하, <u>면소재지 70~100억원내외</u> 3.사업기간 : 좌동	
마 을 권 역 단 위 중 합 정 비 사 업	1.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지역소득, 지역경관,지역역량 2.지원금액 : 25억원~50억원이하 3.사업기간 : 5년간 4.사업단계 : 없음	1.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지역소득, 지역경관,지역역량 2.지원조건 : <u>50억원내외</u> 3.사업기간 : <u>30억원미만 : 3년</u> <u>30이상~50미만 : 4년, 50이상 : 5년</u> 4.사업단계 : <u>1~3단계</u>	
신 규 마 을 조 성 사 업	1.지원내용 : 마을기반사업비, 세부 설계 등 계획수립비 용, 마을운영·관리 프 로그램 개발 2.지원금액 : 12억원~36억원이내 3.사업기간 : 3년간	1.지원내용 : 마을기반사업비, 세부설 계 등 계획수립비용, 마 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2.지원조건 : 12억원~36억원이내 - <u>소규모 시범사업 추가 : 3억원~5.7이내</u> 3.사업기간 : <u>1~3년간</u>	

## 참고 3 | 신규사업성 검토 체크리스트

###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점검 내용	결과
<b>&lt;사업 준비과정&gt;</b>	
① 읍면발전추진협의회는 구성되었는가?	
② 읍면발전추진협의회 구성원은 적정한가?	
③ 읍면발전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은?	
④ 사업추진체계는 적정한가?	
⑤ 지역주민으로부터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였는가?	
⑥ 수요 파악 내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b>&lt;행정 계획&gt;</b>	
⑦ 2014년 포괄보조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⑧ 투자운전순위는 몇 번인가?	
⑨ 읍면별 중심성 분석에 따라 계획되었는가?	
⑩ 해당 읍면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가?	
<b>&lt;사업 계획&gt;</b>	
⑪ 기초 사업계획은 수립되었는가?	
⑫ 계획수립시에 전문가나 재능기부자의 자문실적이 있는가?	
⑬ 해당 사업이 읍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⑭ 사업 내용이 독창적이고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가?	
⑮ 내역사업의 내용이 적정한가?	
⑯ 타 부처나 유사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실적은 없는가?	
⑰ 지원이 제한되는 내용은 없는가?	
<b>&lt;역 량&gt;</b>	
⑱ 사업과 관련 읍면 내 인적자원(관리자 등)은 있는가?	
⑲ 외부 인적 자원의 활용계획은 있는가?	
<b>&lt;부 지&gt;</b>	
⑳ 부지는 확보되었는가?	
* 읍면발전협의회 명의로 등기 여부(개인 명의일 경우는 미확보로 간주)	

점검 내용	결과
②① 부지 미 확보시 확보방안은 있는가? * 매매계약서, 매매동의서 등(임차, 지상권 설정은 불가)	
②② 부지의 규모는 적정한가?	
②③ 부지 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제한사항은 없는가?	
②④ 부지 사용에 대한 주민의 동의(80% 이상)는 받았는가?	
②⑤ 부지의 위치는 적정한가?	
<시 설>	
②⑥ 시설 크기(규모, 예산)는 적정한가?	
②⑦ 시설물 활용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②⑧ 대체시설은 없는가?	
②⑨ 시설별 활용 주체는?	
③⑩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가?	
③⑪ 시설유지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 마련방안은 있는가?	
③⑫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의 동의는 받았는가?	
③⑬ 시설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사항은 없는가?	
③⑭ 시설물의 유지관리자는 지정되었는가?	
<경 관>	
③⑮ 경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③⑯ 경관 계획을 기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가?	
③⑰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가?	
<사후관리>	
③⑱ 보조금 지원 종료시에도 시설물을 지속 활용할 수 있는가?	
③⑲ 보조금 지원 종료시 시설물 유지관리비 확보방안은?	
④① 기타 사업추진 및 운영, 사후관리에 문제는 없는가?	

## 참고 4 | 일반농산어촌 지원제외 및 유의사업 현황

### ① 농산물 생산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축사의 경우는 지원가능(축사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② 마트, 슈퍼 등 판매시설 설치·관리비

-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가능

### ③ 숙박시설,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관리비

-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가능(체험·관광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으로 이용시는 지원 불가)

### ④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노트북 등 구입비

- \* 다만, 장비는 시설에 부착된 설비성격의 장비는 가능

### ⑤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농약, 비료, 종자,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구입비

### ⑥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조성비(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⑦ 소규모 쌀 방앗간 및 미곡종합처리장(단, 소득시설이 아닌 소규모 고추, 떡 방앗간은 가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관리비

### ⑧ 토지구입비(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체육시설 등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부지에 제공되는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 다만 토지구입비가 개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 매입비는 지원 제외

### ⑨ 타부처 예산지원사업(마을기업 등)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에 대한 동일항목의 사업비(홍보·교육·컨설팅·홈페이지, 경상비, 시설비 등)

### ⑩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일체

※ 사업신청서에 제외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동 제외사업을 위한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 배정 후 계획 변경·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제외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보조금의 부당·허위신청으로 간주하여 관련 지원금 회수.



## 참고 5 |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 업 명	사 업 명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31. 문화학교 운영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4. 사이버 가정학습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35. 노량해전 재현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36. 문화의 거리 조성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38.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9. 주요 교육정책 홍보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11.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41. 공주미술제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13.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5.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4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46. 농가도우미 지원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填)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8. 지역정보화 지원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19. 자전거도로 정비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21. 공공도서관 운영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23. 문화의 집 조성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중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54. 사회복지시설 운영
25.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26. 관리책임자대회	56. 공공보건사업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58. 지역봉사사업
29. 조각공원 조성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30. 통영국제음악제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 업 명	사 업 명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92. 아동시설 운영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9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100. 결식아동 급식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10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72.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104.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7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1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109.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81. 경로당 운영	111. 노숙인등보호(노숙인재활시설및노숙인요양시설운영은 제외함)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112. 쪽방생활자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85. 노인건강진단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18. 결연기관 PC 구입비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90. 노인시설 운영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사 업 명	사 업 명
12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45. 수산물 위생안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26.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49. 양식기반시설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50. 마을어장 개발
129.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31. 환승주차장 건설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33. 벽지노선(僻地路線) 손실보상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34. 오지(奧地)·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157. 친환경 화장실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37. 자영수산물 급식비 지원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38. 장보고축제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39. 담수어 참단양식장 시설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162. 임산물 유통·가공
141.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142. 연어 치어(稚漁) 방류	



## V. 부록 3 : 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사 업 명	○○읍/면(동)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신청대상 지역개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외 개리		
	면 적	㎡ (대지 , 임야 , 농경지 , 기타 )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농경지 면적	ha (논 , 밭 , 과수원 ) ※ 친환경농업단지면적 : ha (논 , 밭 , 과수원 )		
	산림면적	ha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보유시설	상업시설	(상설시장, 오일장 등)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문화시설		(복지회관, 도서관, 대중목욕탕 등)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요 사업내용	기초생활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복지사업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기타사업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p>○○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 .</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 장(군수)</p>				

## 공간정보시스템 입력양식(EXCEL)-별첨



###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개요 】

- 목 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사업기간 : 4년간
- 사업량 : 시·군 당 1개 읍 또는 면소재지 이내
- 지원한도 : 읍(동)지역 100억원 이내, 면지역 70억원 내외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읍면소재지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사업 중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가능)
  - 지역역량강화사업(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 지원제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제외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소도읍사업 등을 지원받은 지역
  -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구입비(공공시설의 부지에 제공되는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 다만 토지구입비가 개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유의사항
  - 읍면발전협의회(20인 이내) 구성·운영
  - 획일적 계획수립 지양(총 사업비의 최소 20% 이상 경관계획수립 및 지역경관개선 분야에 투자)
  - 읍/면 소재지가 아닌 인근 마을에 투자 지양(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 경관개선은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

---

○○○○도 ○○시/군

#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

1.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전체분량은 30page 이내로 작성 권고

## I. 사업대상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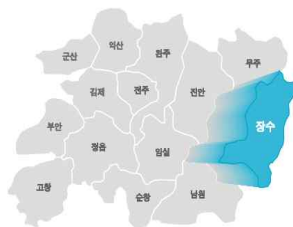
### 1.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 사업계획도(1/50,000 ~ 1/25,000 지형도 등에 A3로 작성)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도



<전국>



<전라북도>



<장수군>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시군지역에서 해당 읍면소재지의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사업대상지 범위설정

- 대상지역 범위 : 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범위설정 배경

- \* 읍(면)소재지를 포함한 하나의 동일 생활권, 상업권 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읍(면)단위의 중심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생활권과 상업권 등이 전혀 틀려 객관적으로 동일한 대상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  
(읍(면)소재지 :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행정리)을 의미함)

## 2. 지역현황

### 가. 사업대상지 연혁

○ 위 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법정리( ), 행정리( ), 자연마을( )

\* 사업대상 지역내의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리명을 기재

○ ○○읍(면) : 법정리수( ), 행정리수( ), 자연마을수( )

\* 사업대상 지역이 속한 읍(면)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수를 기재

○ 인접 읍·면 또는 시·군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 \* 당해 사업대상지가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문화시설과의 거리(km) 및 소요시간(분) 등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사업 대상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 유래 등을 작성
- \* 사업 대상지역의 각 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 나. ○○읍(면) 생활환경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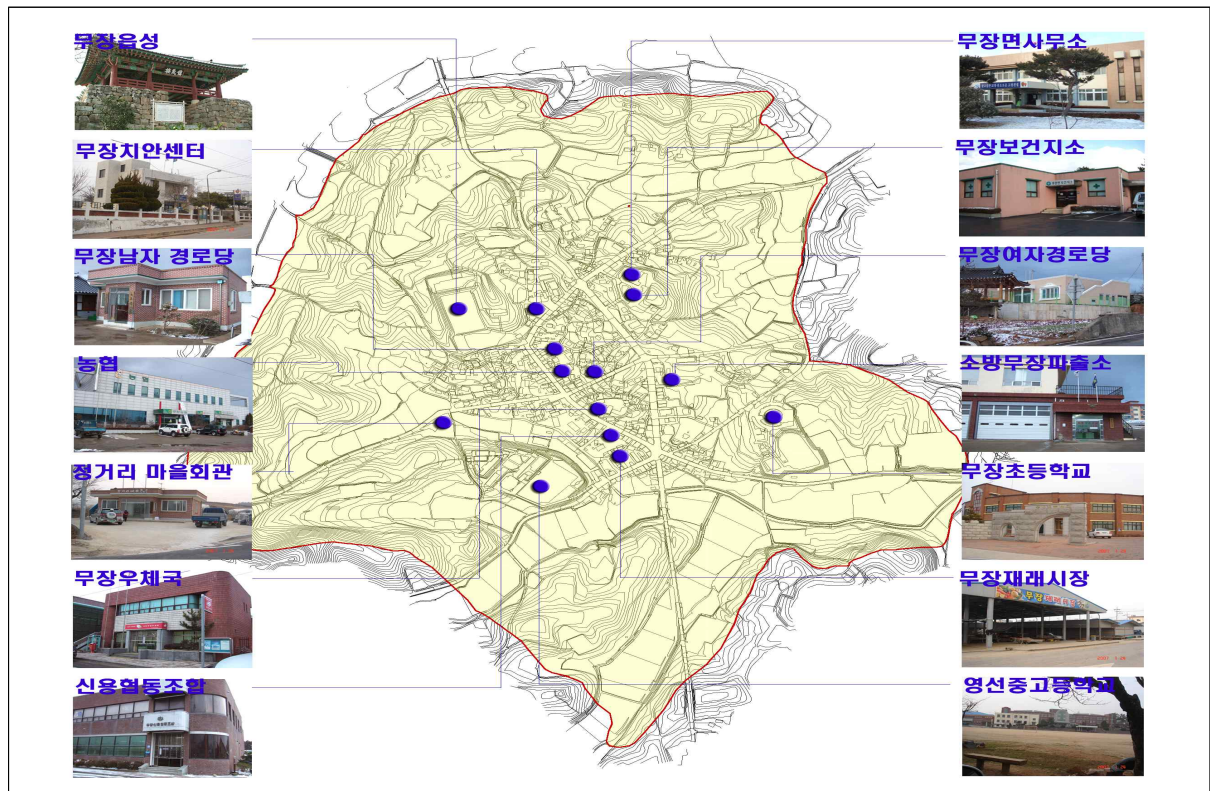
시설 현황	단위	총계획(A)	현재수준(B) (‘12년)	비율(%) (B/A)	향후 계획
○법정도로(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km				
○비법정도로(연결도로, 마을내도로)	km				
○상수도보급율(간이상수도포함)	인				
○하수도보급율(하수처리율)	인				
○복지회관	동				
○마을회관	동				
○체육공원	개소				

※ 읍(면)통계자료, 시군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포괄보조5개년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대상지 현황도(1/25,000 ~ 1/5,000 지형도에 표기)

- \* 지형도내에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의 명칭을 기입하여 표시
- \* 읍(면)의 위치 및 읍(면)소재지 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고, 주변마을의 구역을 실선 혹은 점선을 구분하여 작성
- \* 면소재지내 행정기관, 교육기관, 편의시설 등의 면소재지 현황도를 별도 작성

○○읍(면)소재지 현황도(예시)



다. 사업대상지 현황

○ 인구(농어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마을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 어가	계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	( )									
○○리												
○○리 ·												

※ ( )는 농어가인구수

- \* 권역내의 법정리별로 인구수(남,여, 농어가인구), 가구수(농어가,비농어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하여 법정리 단위로 집계
-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권역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기입

○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 시군전체의 인구구조, 해당읍(면)의 인구구조, 사업대상지의 인구구조에 대해 서술

구분		○○시군		○○읍(면)		사업대상지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합계							
연령	20세 미만						
	20~40세						
	41~64세						
	65세 이상						

※ 2012년말 현재기준으로 작성(시군통계연보 및 읍면 행정자료 참고)

라. 생활편의시설 현황

○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 읍(면)소재지주민 및 인근주민들의 주된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서술

마을명	시설명	면 적(평)	건축년도	이용대상	운영형태	소재지

○ 교육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개교년도	소재지

○ 보건.의료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는 의료시설(보건소, 의원, 병원, 약국 등)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면 적(평)	건축년도	이용상황	병상	비고

○ 금융 및 상업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우체국 등), 및 상업시설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규 모(m <sup>2</sup> )	건축년도	이용대상	소재지	비 고

※ 상업시설의 경우 재래시장 및 전통 5일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마. 지역산업 현황

○ 상가촌 현황

마을명	상가명	판매품종	건축년도 및 층수	종사원수
○ ○ 리	식당			
	슈퍼마켓			
	수리점			
○ ○ 리	횃집			
○ ○ 리				

※

읍(면)소재지 또는 인근마을의 상가건물군을 형성하는 상가의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 (상가건물군 : 10개이상의 상가가 밀집하여 상업공간을 형성하는 도로 혹은 가로)

2. ○ 제조업 현황

마을명	제조업종	생산품	종업원수	면적 및 위치
○ ○ 리				
○ ○ 리				
○ ○ 리				

※ 읍면소재지내의 제조업 공장 및 생산의 현황을 작성

○ 유통 및 가공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통 및 가공시설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면 적(평)	건축년도	이용대상	운영형태	소재지



바.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 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 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민 속자료	주요무 형문화 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군														
( )면														
( ) 권역														

-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 이외에도 권역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지역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 축제	(기간: 일)			
○ ○ 행사	(기간: 일)			

-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 지역 주민 또는 권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사.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리	번 영 회 영 농 회 청 년 회 부 녀 회 4-H클럽 · ·	○○명	○ 회/월		○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리					

-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활동 내용	비고 (구성일자)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위원 ·			- ○○시장(군수) - ○○대학교수 - ○○읍(면) 번영회장 - ○○읍(면) ○○회장 ·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원의 직책과 주요 활동내용을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덧붙임

○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아. 지자체의 지원조직 현황

과명	계(담당)명		주요업무내용	비 고
	계(담당)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

자. 지자체의 학습활동실적

소속/직책	성명	일시/기간	이수교육명	교육주관기관	비고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지역개발관련 교육실적 기재하며 구체적 증빙자료를 별첨

## II.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과의 연계성

○ 시군의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계획(5개년) 등과 관련하여 작성

\* 포괄보조사업 2014년 사업계획에 포함여부와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및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

### Ⅲ. ○○읍(면)소재지 발전방향

#### 1. 기본방향

##### ○ 발전목표 설정

- \* 읍(면)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살고 싶은 정주공간조성과 지속가능한 읍(면)소재지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 및 향토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2. 공간별 발전방향

##### ○ 읍(면)전체 및 읍(면)소재지의 발전방향

- \* 당해 읍(면)전체의 발전방향을 지역자원, 상하위계획, 인적역량, 주민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 읍(면)소재지 지역에서의 해당역할을 명확히 표기

##### ○ 사업대상지의 공간별 발전방향

- \* 공간별 발전방향은 지역여건과 도시계획 등 기존 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읍면발전협의회 및 지역주민회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 3.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기초생활기반확충

##### ○ 지역경관개선

##### ○ 지역역량강화

- ※ 2010~2014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5개년)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p23. 붙임3>의 기능별 사업(세부내용)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각 시설,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농어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

##### ○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에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마을보호수,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예산의 10%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언급

### IV. 사업비 투자계획 (해당 신규사업의 총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구분)

#### 1. 재정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경관개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세부사업	총 액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1. 기초생활기반확충																				
① 연결도로																				
② 주차장																				
：																				
2. 지역경관개선																				
① 전선지중화																				
② 가로정비																				
：																				
3. 지역역량강화																				
① 주민교육																				
② 부대비용																				
：																				

# 메 모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